

언론중재위원회

연간보고서

2023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목차

CONTENTS

PART 1.

총론

PART 2.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일반현황	12
1. 설립근거 및 기능	12
2. 연혁	13
3. 임원 명단	15
4. 기구	16
5. 위원회의 미션과 비전	21
제2장 2023년도 정책성과	22
추진과제 및 주요성과	22
제1장 언론조정	28
제1절 개요	28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28
2. 중재부의 구성	29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29
1. 청구현황	29
2. 청구권별 현황	29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30
4. 침해유형별 청구현황	31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32
6. 중재부별 접수현황	33
7. 접수 경로별 청구현황	34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35
1. 개요	35
2. 피해구제율 현황	36
3. 청구권별 처리결과	36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42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43
6. 신청인 유형별 처리 결과	45

7. 중재부별 처리결과	48
8.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50
제4절 평가	51
제2장 시정권고	53
제1절 개요	5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54
1. 시정권고 현황	54
2. 침해 유형별 분석	54
3. 매체 유형별 분석	61
4. 법익 침해 반복 언론사에 대한 조치	61
제3절 평가	62
제3장 선거기사심의	63
제1절 개요	6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65
1.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65
2.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68
3. 선심위 운영의 체계성·전문성 제고	71
4. 심의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71
제3절 평가	72

목차

CONTENTS

PART 3.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제1장 언론피해 상담	76
제1절 개요	76
제2절 주요 실적	77
1. 상담경로	77
2. 상담 처리결과	77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78
4. 상담매체 유형	79
5. 상담신청인 유형	80
6. 상담대상 유형	80
7. 피해구제수단	82
제3절 평가	82
제2장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84
제1절 개요	84
제2절 주요 추진실적	86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86
2. 언론인 대상 연수	86
3.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88
4. 대학생 대상 교육	89
5. 청소년 대상 교육	89
6. 각급 기관 대상 교육	91
7. 일반인 연수	92
8. 선거기사심의제도 연수	93
9. 모의조정대회 개최	94
10. 교육콘텐츠 개발	95
제3절 평가	95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97
제1절 개요	9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98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98
2. 토론회 등 학술행사 개최	107
3.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실시	110
제3절 평가	111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112
제1절 개요	112
제2절 주요 조사결과	114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114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116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117
제3절 평가	118
제5장 홍보	119
제1절 개요	119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20
1. 온라인 홍보활동 및 오프라인 광고 집행	120
2. 대국민 직접 소통 강화 홍보활동 전개	124
3. 위원회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126
4. 국제협력 사업	126
5. 지역 홍보활동 전개	129
제3절 평가	131
제6장 기타 주요활동	132
1.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132
2. 전산 시스템 안정성 확보	133
3.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구축	134

목차

CONTENTS

PART 4. 2024년도 업무계획

1. 2024년도 위원회 대내외 환경요인	138
2. 2024년도 위원회 핵심 과제	139
3. 세부 추진과제	140

부록

1. 중재위원 현황	144
2. 2023년 예·결산 현황	153
3. 2023년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153
4. 2023년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 내용	154
5. 2023년 주요 발간물 목록	154

표목차

표 1. 최근 3년간 조정청구현황	29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30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30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31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32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33
표 7. 최근 3년간 접수 경로별 청구현황	34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35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36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37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39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39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40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40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41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42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43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44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개인)	46
표 20.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단체)	47
표 21. 중재부별 처리결과	48
표 22. 2023년도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	54
표 23.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55
표 2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61
표 25.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65
표 26.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66
표 27.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69
표 28. 상담경로	77
표 29. 상담 처리결과	78
표 30.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78
표 31. 상담매체 유형	79
표 32. 상담신청인 유형	80
표 33. 상담대상 유형(통계양식 변경 전)	81
표 34. 상담대상 유형(통계양식 변경 후)	81
표 35. 피해구제수단	82
표 36. 2023년도 교육 실시현황	85
표 37.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86
표 38. <언론인 전문 연수> 실시 현황	87
표 39.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 현황	87
표 40.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현황	88
표 41. <대학생 연수> 실시 현황	89
표 42. <맞춤형 위탁연수> 실시 현황	91
표 43. <일반인 연수> 실시 현황	92
표 44. <선거기사심의제도 연수> 실시 현황	93

2023년 주요행사

■ 2023년도 위원회 사무식



2023. 1. 2.

■ 창립42주년 기념 커피차 이벤트



2023. 3. 29.

■ 위원회 정기총회



2023. 4. 10.

■ 중재위원 연수



2023. 5. 12.~5. 13.

■ 예비법조인 연수



2023. 8. 7.~8. 11.

■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2023. 6. 11. ~ 6. 18.

■ 대학생 영상기자단 발대식



2023. 7. 10.

■ 모의조정대회



2023. 9. 21.

■ 우리동네캐릭터 축제 참가



2023. 10. 14.~15.

■ 토론회 개최



2023. 11. 15.

■ 국제 컨퍼런스 참석



2023. 12. 4.~12. 8.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2023. 12. 11.

2023 ANNUAL REPORT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ART

1

총론

제1장 일반현황

1. 설립근거 및 기능
2. 연혁
3. 임원 명단
4. 기구
5. 미션과 비전

제2장 2023년도 정책성과

제장

일반현황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1

설립근거 및 기능

가. 설립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 심의 및 시정권고
-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심의
- 언론보도피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방법 안내
-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분쟁해결 전문교육
-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980	<p>1981.03.31.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 제1기 중재위원 39명 위촉 - 안우만 위원장(제1·2대) 취임 - 서울 4개 중재부와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지역중재부 설치(총 13개 중재부) - 사무국(서울 중구 의주로 1가 1 백초빌딩) 및 9개 지역사무소 설치</p> <p>1981.04.29. 언론중재위원회 현판식(사무국)</p> <p>1984.03.02. 경남중재부 신설</p> <p>1985.04.03. 임규운 위원장(제3대) 취임</p> <p>1985.04.21. 사무국을 현주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5층)로 이전</p> <p>1986.02.24. 정희택 위원장(제4~6대) 취임</p> <p>1987.11.28.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 -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p>
1990	<p>1991.03.29. 창립 1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p> <p>1993.03.31. 김두현 위원장(제7·8대) 취임</p> <p>1995.12.30.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직권조정결정권' 부여 등</p> <p>1996.07.01.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충남중재부를 대전중재부로 명칭 변경 - 서울 제5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75인으로 증원</p> <p>1999.04.09. 박영식 위원장(제9·10대) 취임</p>
2000	<p>2000.02.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p> <p>2001.03.30.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p> <p>2004.04.01. 상담 및 교육 전담 부서 신설</p> <p>2005.0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도입 -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가능 - 인터넷신문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p>

	2005.03.31. 조준희 위원장(제11대) 취임
	2005.07.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5.09.02. 서울 제6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80명으로 증원
	2006.06.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언론중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합헌 - 시정권고제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 각하 -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가처분으로 하는 규정은 위헌
	2007.04.27. 위원회 새 CI 선포
	2008.04.07. 권 성 위원장(제12·13대) 취임
	2009.02.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등이 접수되는 경우 청구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 폐지
	2009.08.07.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09.01. 서울 제7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85명으로 증원
2010	2010.01.25.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외에 재·보궐선거 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2011.04.11. 창립 3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014.03.31. 서울 제8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90명으로 증원
	2014.04.29. 박용상 위원장(제14대) 취임
	2015.07.30. 「공직선거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명령은 위헌
	2017.01.01. 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지정(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9호)
	2017.02.08.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고결정문 도입 등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유형 다양화
	2017.08.28. 양인석 위원장(제15대) 취임
	2018.09.17. 이석형 위원장(제16대) 취임
2020	2021.03.30. 창립 4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6층 위원회 회의실)
	2021.09.01. 이석형 위원장(제17대) 취임

3 임원 명단

(2023년 12월 말 현재)

성 명	주요 경력	중재부
 위원장 이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등법원 판사 • 감사원 감사위원 • 제16대 언론중재위원장('18.9.17.~'21.8.31.) • (현)제17대 언론중재위원장, 변호사 	서울 제7중재부
 부위원장 이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체육부장, 스포츠사업팀장(국장급) • 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 • (현)대한언론인회 총괄부회장 	서울 제4중재부
 부위원장 권희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상담위원 • (현)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남중재부
 감사 문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 (현)경찰청 법률자문단장 • (현)변호사 	서울 제4중재부
 감사 김혜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현)한국향로표지기술원 감사 • (현)변호사 	충북중재부

가. 위원총회

- 구성 : 중재위원 90명
- 기능
 -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
 - 사업실적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나. 운영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9명
- 기능
 - 위원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처리
 -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검토
 -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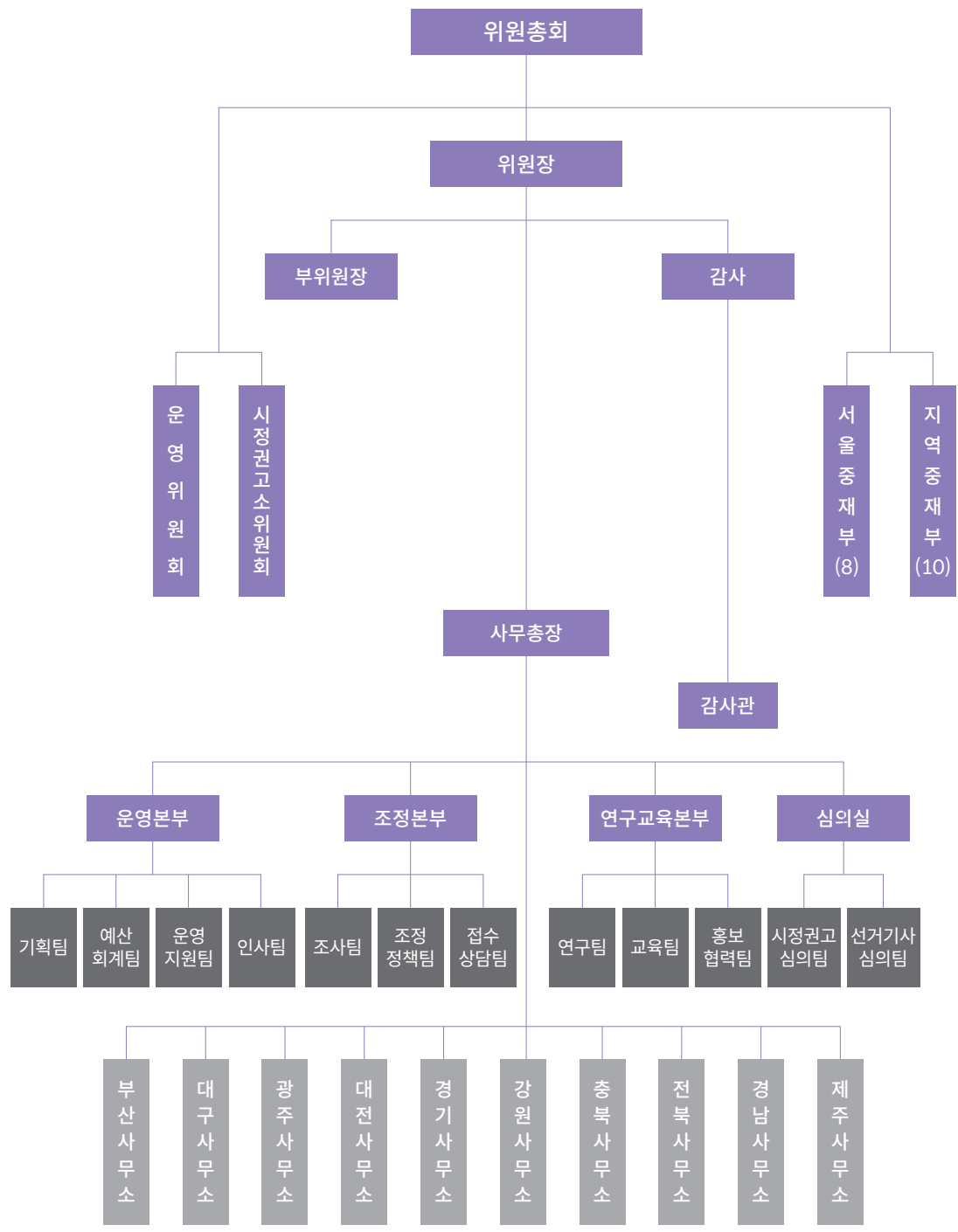
다. 시정권고소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7명
- 기능
 -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
 - 시정권고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

라. 중재부

- 구성
 - 중재위원 5명
 - 전국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
- 기능
 - 조정·중재신청에 따라 조정·중재업무 처리

마. 위원회 기구표




바. 사무처

• 인원 현황

(단위 : 명 / 2023년 12월 말 현재)

구 분	별정직	일반직	계
정 원	1	95	96
현 원	1	93	94

• 사무총장

성 명	주요경력
 사무총장 조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광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 위원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운영본부장

• 부서별 주요업무

부서		주요업무
운영 본부	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 및 평가 • 중재위원 위·해촉 관련 업무 • 위원총회 진행 • 운영위원회 진행 • 위원회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관련 법률의 유권해석 및 소송업무 총괄 • 위원회 내부 규정의 관리 • 위원회 관련 대외기관 협력 • 국정감사 수감 등 국회 업무협조 관련 업무 • 연간보고서,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 발간 • 위원회 경영정보 관리 및 정보공개청구 관련 업무 • 제안제도 운영 등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편성, 관리 및 조정 • 예산 사업의 심사, 분석 및 평가 • 예산의 집행 및 결산 관련 업무 • 회계 관련 외부 평가 및 공인회계사 감사 수감 • 위원회 성과지표 관리

부서		주요업무
운영 본부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복리후생 및 국내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자산 및 시설의 관리·유지 •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문서의 수발, 통제, 보존 및 폐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직원그룹웨어,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 위원회 정보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 위원회 계약 체결 관련 업무 • 재난관리 및 보안 관련 업무 • 사회공헌활동 관련 업무
	인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성과평가 등 각종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력 운용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노무 관련 업무 • 인사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복무관리 운영 총괄 •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인사·급여연동 복리후생 관리
조정 본부	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재부 조정중재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기록 관리, 사실조회 및 증거조사 포함)
	조정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중재 실무절차 및 제도 개선 • 조정중재 업무와 관련한 소위원회의 운영 • 조사관 공식 지역중재부 조정중재 사건처리 • 법원 소제기 현황 • 조정중재시스템, 조정중재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 관리 • 조정중재사례집, 조사관 업무가이드 발간 • 조정중재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검토 • 중재위원 연수 진행 • 조사관 직무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실행
	접수상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피해구제 관련 지역별 상담업무 총괄 • 조정신청 관련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상담 관련 통계 관리 • 상담실무매뉴얼, 언론피해상담사례집 발간 • 전자신청시스템 관리
연구 교육 본부	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법제 관련 각종 제도·정책의 학술연구 및 관련 연구용역 사업 • 학술지, 계간지(언론중재),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연구보고서 발간 • 토론회 등 위원회 학술관련 행사 주관 • 국내·외 언론유관기관 동향 및 현황자료 수집 • 위원회 자료실 및 학술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

부서		주요업무
연구 교육 본부	교육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피해구제 등 위원회 교육 관련 업무 • 위원회 교육 관련 통계 관리 • 대내외 교육 강사진의 운영 및 관리 • 교육 관련 대외 협력 업무
	홍보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대외홍보 관련 업무 총괄 • 광고 등의 제작 및 집행 • 위원회 대외홍보 매체, 홍보책자, 홍보물품의 제작·운영·관리 • 위원회 홍보 관련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 등 국외협력사업
심의실	시정권고 심의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권고소위원회 업무 지원 • 시정권고 관련 업무 전국 네트워크 총괄 • 시정권고 관련 통계 관리 • 시정권고사례집 발간 • 시정권고시스템 관리
	선거기사 심의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업무 지원 • 선거기사심의위원 위·해촉 관련 업무 • 선거기사심의시스템, 선거기사심의 관련 통계 및 매체 구독 관리 • 선거기사심의백서 발간 및 심의 관련 교육
지역사무소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중재부 조정중재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기록 관리, 사실조회 및 증거조사 포함) •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업무 지원 • 언론피해구제 관련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지역 내 위원회 교육 실시 및 지원 • 지역사무소의 회계, 자산, 시설관리 업무 • 지역 내 대외 업무협의 관련 사항

5 위원회의 미션과 비전

미션과 비전

▣ 미션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로 국민 행복에 기여



▣ 비전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한 분쟁조정 전문기관

▣ 핵심가치 **공정과 신속** (하) **소통** (대화) **전문성** (사람) **혁신** (불꽃)

▣ 전략과제 **준사법 독립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신뢰받는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미디어법제 연구 및 정책기능 확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수립 및 성장기반 구축**



▣ 사무처 미션 위원회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핵심가치 실천

▣ 실천과제 **[PROFESSIONAL]** 인적 자원의 전문역량 강화 **[ACTIVE]** 적극적 제도개선 및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COLLABORATIVE]** 상호 협력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확대

제2장

2023년도 위원회 정책성과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추진과제 및 주요성과

우리 위원회는 2023년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로 국민 행복에 기여】라는 미션을 정립하고, 중장기 비전으로서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한 분쟁조정 전문기관】이라는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미션과 비전의 달성을 위해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핵심 가치로 1. 공정과 신속, 2. 소통, 3. 전문성, 4. 혁신을 설정하여 준사법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다 신뢰받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위원회는 2023년도 핵심 과제로 ‘피해구제의 질적 향상을 통한 조정제도 운용 내실화’와 ‘기사 심의의 실효성 제고’를 설정하고, 여섯 가지 세부 추진 과제로 ▲피해구제의 질적 성장 기반 마련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환경 조성 ▲언론사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권고 실효성 증진 ▲선거기사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등 디지털미디어 관련 입법 적극 추진 ▲위원회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효율적 업무 환경 조성으로 각 설정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1 피해구제의 질적 성장 기반 마련

- [피해구제율 제고] 중재부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2023년도 피해구제율은 전년 대비 약 6% 이상 상승한 74.1%를 달성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 상승 추세 유지
※ 2021년 62.7% → 2022년 67.8% → 2023년 74.1%
- [조정실무 역량 강화] ▲조사관 회의 정례화로 다양한 법리 검토 및 조정기법 공유, ▲조사관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관 직무 사내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함

으로써 조정실무능력 향상에 기여

※ 조사관 직무 사내교육프로그램 개설 TF('22.9.15.~'22.10.14.)의 프로그램 구성안에 따라 '23.3.20.~3.24.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본과정 교육 실시

- [실질적 피해구제 효과 측정 통계 생산] 피해구제의 질적 효과 가능을 위해 피해구제보도문의 길이 및 게재방식 등에 대한 통계분석 실시 및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관련 데이터 등 정책적 필요에 따른 데이터 신규 생산
- [조정 관련 법리 등 심층 검토] 「추후보도청구 요건 관련 소위원회」('23.6.~8.)를 운영해 실무적용 기준 등에 대한 검토 및 실무상 고려사항, 입법적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고, 그 외 조정심리 시 주심위원회 타 기관 운영 현황 및 적용 방향을 검토하는 등 조정실무 관련 이슈에 대한 심층 연구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환경 조성

- [사회적 약자 차별적 보도에 대한 심의 강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차별금지 심의기준 위반 관련 시정권고 결정건수 대폭 증대

※ 차별금지 기준 위반 시정권고 결정건수 2022년 50건 → 2023년 286건

- [장애인 당사자의 조정심리 지원 방안 추진] 장애인의 심리 참여 편의를 지원하고자 각종 업무 규정 개정, 시설 개선 등 세부 실행방안 마련 및 실행

※ 「언론조정중재규칙」, 「언론조정 및 중재절차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에 관한 세칙」 개정→ 장애인이 조정기일에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조정절차 참여 및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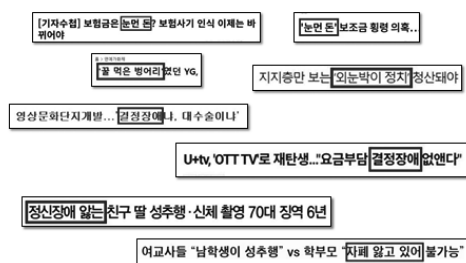
※ 점자안내문 제작 및 비치, 조정심리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 제작, 홈페이지 일부 개편

※ 장애인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공사 및 집기 구입

- [혐오·차별적 표현 예방 교육 강화] ▲언론인 대상 연수프로그램 및 상시교육에 관련 내용 필수 반영, ▲일반인 대상 교육 시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주지, ▲장애인 학생(국립서울맹학교 등) 대상 맞춤형 위탁 연수 실시

※ 장애 차별적 표현 언론보도 예방 관련 교육내용 예시

▲ 장애 차별적 표현 문제



3 언론사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권고 실효성 증진

- [심의 유관기관 교류 추진] 관련 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해 실무자급 간담을 통해 심의기준 및 현황 관련 의견 교환 및 이슈 공유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와 11.8. 실무자급 간담 개최
- [언론사 의견 수렴 창구 확대 방안 모색] 언론 현업단체의 시정권고 관련 의견 수렴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 지속적 소통 창구 단초 마련
※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12.15. 관련 간담 개최

4 선거기사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관련 홍보·교육 적극 실시] ▲선거기사심의제도 관련 교육 상설화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교육신청 창구 별도 신설, 교육 대상을 언론사에서 정당, 후보자 등으로 확대), ▲언론사에 선거기사 가이드북 등 발간물 및 보도자료 적극 배포, ▲위원회 온라인 홍보채널(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별도 홍보
- [심의원의 업무연속성 유지 및 전문성 강화] ▲심의 모니터원의 채용기간 등 조정해 심의업무의 연속성 도모, ▲심의기준 및 기존 심의사례 분석을 통해 심의인력의 역량 제고

5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등 디지털미디어 관련 입법 적극 추진

-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노력] 온라인 동영상플랫폼에 대한 피해구제 영역 확대를 위한 개정안 등 적극 검토 및 대처, 유관기관과 법 개정 관련 이슈 적극 협의, 對 국회활동 강화
- [디지털미디어 관련 입법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강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대상 판결 수집, 분석(『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및 해외 반론권 제도 연구 등(『2023년도 해외언론법 제연구보고서』) 정책·학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 강화, ▲전문 연구인력을 보강해 학술동향 및 외부 연구정보 축적 및 제공

6 위원회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

- [위원회 미션, 비전, 핵심가치 설정] 위원회의 정체성 확립 및 향후 사업전략·각종 계획 수립 시 기초 및 방향성을 활용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미션, 비전 등 수립 후 전사 공유
 - ※ 미션 :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로 국민 행복에 기여>
 - 비전 :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한 분쟁조정 전문기관>
- [사무처 직제 개편] 사무처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부서별 업무의 유기성 확보를 위한 직제의 개편 완료
 - ※ 7.1.자 직제개편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 조정, 인사 및 노무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별도 인사부서 신설, 각 분부 내 정책·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재분장 및 부서명칭 변경 등
- [대민업무 서비스 강화 및 직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반 환경 마련] ▲심리실 증설 및 당사자 대기공간 신설로 원만한 심리진행 및 대민업무를 지원하고 이용 당사자 만족도 제고, ▲대민 업무 담당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출입단말기 설치 및 휴대용 보호장비 제공,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로 업무 효율성 증대, ▲신설된 인사부서에서 인사·노무 관련 각종 이슈 전문 검토 및 규정 등 적극 반영

7 기타 성과

- [온라인 홍보채널 적극 활용, 이용자 참여형 캠페인 추진] ▲퀴즈쇼, 웹드라마 등 트렌디한 시리 즈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적극 게시, 인스타그램 계정 신규 오픈 등 온라인 홍보채널을 통한 홍보전략 전개, ▲커피차 이벤트 개최, 대학생 영상기자단 운영,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행사 참여, 위원회 최초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한 친근한 이미지 구축 및 호감도 제고
- [개인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및 시범운영] 전사적 차원의 개인정보유출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력물 보안 시스템을 통해 문서의 무단유통 및 유출 방지
- [제도 및 실무개선을 위한 연구결과물 도출] ▲위원회 발간물의 정책·학술적 연구기능을 강화 해 법정 업무의 실무개선을 위한 기획 콘텐츠 마련, ▲국내외 학술정보 전사 공유 활성화, ▲언론 법제 관련 주요 학술지로 자리매김한 「미디어와 인격권」의 등재후보지 유지, ▲연구간행물의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학술정보서비스 무료 열람 및 다운로드 지원 조치
 - ※ 계간「언론중재」 최신 주제 : 조정의 비밀유지 의무, 추후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고찰, 최근 자살보도 주요 이슈 등

2023 ANNUAL REPORT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ART

2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언론조정

제1절 개요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제4절 평가

제2장 시정권고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제3장 선거기사심의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제장

언론조정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제1절 | 개요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명예 및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조정·중재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대상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공적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5년부터 매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전체 사건의 약 70% 중반을 상회(2023년 78.5%)하고 있다.

2023년 위원회는 유튜브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중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등 채널에 게재된 뉴스 콘텐츠를 조정대상 매체로 포함하는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사가 아닌 자(개인 등)가 제공한 유튜브등의 뉴스 콘텐츠를 조정대상 매체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한 법률적, 실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총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부장판사)을 포함하여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언론인, 그리고 언론 관련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절 | 조정사건 청구현황

1 청구현황

위원회가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4,085건으로 전년 대비 910건(28.7%) 증가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조정청구현황

(2021. 1. 1. ~ 2023. 12. 31.)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청구건수	4,278	3,175	4,085

2 청구권별 현황

2023년에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은 정정보도청구 1,943건(47.6%), 손해배상청구 1,312건(32.1%), 반론보도청구 731건(17.9%), 추후보도청구 99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손해배상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청구명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정정	1,832 (42.8)	1,432 (45.1)	1,943 (47.6)	5,207 (45.1)
반론	870 (20.3)	653 (20.6)	731 (17.9)	2,254 (19.5)
추후	204 (4.8)	81 (2.6)	99 (2.4)	384 (3.3)
손배	1,372 (32.1)	1,009 (31.8)	1,312 (32.1)	3,693 (32.0)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 () 안의 숫자는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2,491건(61.0%)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뉴스서비스 498건(12.2%), 신문 487건(11.9%), 방송 345건(8.4%), 뉴스통신 218(5.3%) 순으로 이어졌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신청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21. 1. 1. ~ 2023. 12. 31.)

매체유형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신문	일간	322	234	388	944
	신문	(7.5)	(7.4)	(9.5)	(8.2)
	주간	131	75	99	305
	신문	(3.1)	(2.4)	(2.4)	(2.6)
방 송	495 (11.6)	387 (12.2)	345 (8.4)	1,227 (10.6)	

매체유형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잡 지	8 (0.2)	6 (0.2)	8 (0.2)	22 (0.2)
뉴스통신	216 (5.0)	149 (4.7)	218 (5.3)	583 (5.1)
인터넷신문	2,477 (57.9)	1,857 (58.5)	2,491 (61.0)	6,825 (59.2)
인터넷뉴스 서비스	609 (14.2)	450 (14.2)	498 (12.2)	1,557 (13.5)
기 타	20 (0.5)	17 (0.5)	38 (0.9)	75 (0.7)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 () 안의 숫자는 %

4 침해유형별 청구현황

2023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4,042건(9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초상권 침해 21건(0.5%), 재산상 손해 4건(0.1%), 사생활 및 성명권 침해 각 3건(0.1%), 음성권 침해 1건(0.0%) 등의 순이었다.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침해유형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명예훼손	4,123 (96.4)	3,093 (97.4)	4,042 (98.9)	11,258 (97.6)
초상권 침해	66 (1.5)	41 (1.3)	21 (0.5)	128 (1.1)
음성권 침해	13 (0.3)	2 (0.1)	1 (0.0)	16 (0.1)
성명권 침해	7 (0.2)	2 (0.1)	3 (0.1)	12 (0.1)
사생활 침해	12 (0.3)	15 (0.5)	3 (0.1)	30 (0.3)

침해유형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재산상 손해	47 (1.1)	19 (0.6)	4 (0.1)	70 (0.6)
기 타	10 (0.2)	3 (0.1)	11 (0.3)	24 (0.2)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 ()안의 숫자는 %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신청인 유형별로 2023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이 2,225건(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업체 757건(18.5%), 일반단체 536건(13.1%), 지자체 154건(3.8%), 언론사 141건(3.5%)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2년에 비해 일반단체의 청구건수는 감소한 반면 기업체와 지자체, 언론사의 청구건수는 증가했다.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신청인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개인	2,569 (60.1)	1,699 (53.5)	2,225 (54.5)	6,493 (56.3)
국가기관	87 (2.0)	32 (1.0)	77 (1.9)	196 (1.7)
지자체	158 (3.7)	85 (2.7)	154 (3.8)	397 (3.4)
공공단체	105 (2.5)	100 (3.1)	101 (2.5)	306 (2.7)
일반단체	499 (11.7)	710 (22.4)	536 (13.1)	1,745 (15.1)
종교단체	48 (1.1)	28 (0.9)	46 (1.1)	122 (1.1)
기업체	674 (15.8)	441 (13.9)	757 (18.5)	1,872 (16.2)

신청인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언론사	78 (1.8)	39 (1.2)	141 (3.5)	258 (2.2)
교육기관	60 (1.4)	37 (1.2)	48 (1.2)	145 (1.3)
기타		4 (0.1)		4 (0.0)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 () 안의 숫자는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3년 조정사건을 중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4,085건 중 서울 중재부(8개)가 3,114건(76.2%), 지역 중재부(10개)가 971건(23.8%)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 357건(8.7%), 대구중재부 123건(3.0%), 광주중재부 117건(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중재부는 98건(2.4%), 충북중재부는 82건(2.0%)을 접수하여 2022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경기중재부는 매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별도로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천광역시와 경기중재부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의 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1. 1. 1. ~ 2023. 12. 31.)

중재부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서울중재부	2,969 (69.4)	2,377 (74.9)	3,114 (76.2)	8,460 (73.3)
부산중재부	108 (2.5)	55 (1.7)	23 (0.6)	186 (1.6)
대구중재부	153 (3.6)	114 (3.6)	123 (3.0)	390 (3.4)
광주중재부	131 (3.1)	81 (2.6)	117 (2.9)	329 (2.9)

종재부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대전종재부	52 (1.2)	60 (1.9)	67 (1.6)	179 (1.6)
경기종재부	390 (9.1)	250 (7.9)	357 (8.7)	997 (8.6)
강원종재부	28 (0.7)	25 (0.8)	33 (0.8)	86 (0.7)
충북종재부	61 (1.4)	39 (1.2)	82 (2.0)	182 (1.6)
전북종재부	149 (3.5)	50 (1.6)	98 (2.4)	297 (2.6)
경남종재부	174 (4.1)	99 (3.1)	58 (1.4)	331 (2.9)
제주종재부	63 (1.5)	25 (0.8)	13 (0.3)	101 (0.9)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7 접수 경로별 청구현황

신청서 접수 경로별로는 이메일이 2,814건(68.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자신청 접수건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1,123건(27.5%)이었고, 우편 97건(2.4%), 방문 46건(1.1%), 구술 5건(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메일과 전자신청을 통한 온라인 접수 비중이 2021년 92.7%, 2022년 95.5%, 2023년 96.4%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방문·우편·구술 등의 오프라인 접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7. 최근 3년간 접수 경로별 청구현황

(2021. 1. 1. ~ 2023. 12. 31.)

연도 \ 구분	방문	우편	전자신청	구술	이메일	계
2021	144 (3.4)	160 (3.7)	858 (20.1)	10 (0.2)	3,106 (72.6)	4,278 (100)
2022	49 (1.5)	93 (2.9)	1,083 (34.1)	2 (0.1)	1,948 (61.4)	3,175 (100)
2023	46 (1.1)	97 (2.4)	1,123 (27.5)	5 (0.1)	2,814 (68.9)	4,085 (100.0)

* () 안의 숫자는 %

제3절 | 조정사건 처리결과

1 개요

2023년 조정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1,599건(39.1%), 취하 1,340건(32.8%), 조정불성립결정 793건(19.4%), 기각 145건(3.5%), 각하 113건(2.8%) 직권조정결정 95건(2.3%) 순이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고, 피해구제로 취하 처리된 사건 비율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불성립결정이나 직권 조정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1. 1. 1. ~ 2023. 12. 31.)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1	4,278	1,221	146	73 [4]	894 [16]	596	132	838	378	62.7%
	%	28.5	3.4	1.7	20.9	13.9	3.1	19.6	8.8	
2022	3,175	949	69	34	684 [8]	450	193	686	110	67.6%
	%	29.9	2.2	1.1	21.5	14.2	6.1	21.6	3.5	
2023	4,085	1,599	61	34 [3]	793 [20]	145	113	1,152	188	74.1%
	%	39.1	1.5	0.8	19.4	3.5	2.8	28.2	4.6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 / {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 100

2

피해구제율 현황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신청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이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비율을 말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확정된 사건,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사건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023년 피해구제율은 74.1%로 전년의 67.6%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조정성립률이 전년 대비 상당히 높아졌고, 피해를 구제받고 취하한 사건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연도	구분 청구건수 (A)	기각, 각하 건수 (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21	4,278	728	3,550	2,225	62.7%
2022	3,175	643	2,532	1,712	67.6%
2023	4,085	258	3,827	2,835	74.1%

3

청구권별 처리결과

가. 개요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41%, 반론보도청구 43.4%, 추후보도청구 10.1%, 손해배상청구 36.3%로, 추후보도청구를 제외하면 전년과 비교해 모두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조정성립률 자체는 작년보다 낮아졌으나 피해구제로 취하된 비율이 63.6%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추후보도청구 심리가 열리기 전 피신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신청인측과 합의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비율은 궁극적으로는 높아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기각 및 각하 처리된 사건의 비율은 전년보다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2022년도에 모 단체 등의 다량 신청 사건으로 인해 기각 및 각하 사건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정정	1,943 (100)	796 (41)	53 (2.7)	382 (19.7)	74 (3.8)	31 (1.6)	523 (26.9)	84 (4.3)
반론	731 (100)	317 (43.4)	17 (2.3)	138 (18.9)	10 (1.4)	6 (0.8)	195 (26.7)	48 (6.6)
추후	99 (100)	10 (10.1)	0 (0)	3 (3.0)	5 (5.1)	17 (17.2)	63 (63.6)	1 (1)
손배	1,312 (100)	476 (36.3)	25 (1.9)	270 (20.6)	56 (4.3)	59 (4.5)	371 (28.3)	55 (4.2)
계	4,085 (100)	1,599 (39.1)	95 (2.3)	793 (19.4)	145 (3.5)	113 (2.8)	1,152 (28.2)	188 (4.6)

* ()안의 숫자는 %

사례 1. 정정보도

A언론사는 모 조합장이 조합원이나 이사회 보고 없이 거액의 공탁금을 집행하고, 수백억의 특별성
과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적합한 회계
감사를 거쳐 공탁금을 집행하였고 수백억원의 특별성과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
구했다.

심리결과, A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2. 반론보도

B언론사는 신청인 조합장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평가 기준을 임의로 수정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준을 수정한 것이고,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한 것이라면서 반론
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B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3. 추후보도

C언론사는 신청인 남편이 직원과 다투다 흥기를 휘둘러 양 측이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자신의 남편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고, 상대방인 직원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C언론사가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4. 손해배상

D언론사는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동생인 신청인이 암호화폐 회사의 사장인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피해가 인정되는 점, 언론사가 신청인의 요구를 받고 즉시 기사를 수정한 점을 감안하여 D언론사가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5.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E언론사는 학회장으로 있는 신청인이 학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은 사퇴의사를 밝힌바가 없다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E언론사가 기존 기사를 열람차단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후 손해배상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① 처리현황

2023년 손해배상청구 1,312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476건(36.3%), 직권조정결정 25건(1.9%), 조정불성립결정 270건(20.6%), 기각 56건(4.3%), 각하 59건(4.5%), 취하 426건(32.5%)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건의 조정성립 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모든 청구권별 조정성립 건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져 피해구제로 종결된 취하 사건 수는 전년 대비 120건 증가했으며, 기각 처리된 사건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21. 1. 1. ~ 2023.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1	1,372 (100.0)	363 (26.5)	45 (3.3)	26 (1.9)	326 [6] (23.8)	237 (17.3)	39 (2.8)	226 (16.5)	110 (8.0)
2022	1,009 (100.0)	251 (24.9)	18 (1.8)	13 (1.3)	226 [5] (22.4)	146 (14.5)	70 (6.9)	251 (24.9)	34 (3.4)
2023	1,312 (100.0)	476 (36.3)	15 (1.1)	10 (0.8)	270 [8] (20.6)	56 (4.3)	59 (4.5)	371 (28.3)	55 (4.2)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1,312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실제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28건(2.1%)으로 전년 18건(1.8%)에 비해 증가하였다. 다만, 금전배상을 포함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 기사의 수정 및 열람 차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된 경우를 더하면,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피해 구제된 조정사건 수의 비율은 약 66%로 나타났다.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021. 1. 1. ~ 2023. 12. 31.)

연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인용건수	인용률[%]
2021	1,372	74	5.4%
2022	1,009	18	1.8%
2023	1,312	28	2.1%

② 청구액 및 조정액

2023년 손해배상청구 최고액은 2,200억 원, 최저액은 50원이었으며, 조정 최고액은 500만 원, 최저액은 30만 원이었다.

2023년 손해배상 인용빈도는 전년도 18건에서 28건으로 증가했다. 인용 최고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평균 인용액도 1,660,870원으로 전년 대비 약 90만원 가량 감소했다.

2023년 손해배상 최고 인용액은 500만 원이었다. 신청인은 사기 사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피의자의 친동생으로, 신청인의 어린 시절 사진이 해당 피의자의 사진으로 보도돼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심리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였다.

사례 6. 손해배상 최고 인용 사례

F언론사는 전국적 관심을 받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어린 시절 사진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과 관계없는 명예훼손성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공개된 점이 인정되어 F언론사가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21. 1. 1. ~ 2023. 12. 31. / 단위 : 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1	10	5,000,000,000	75,435,806	15,000,000
2022	1	220,000,000,000	372,306,712	20,000,000
2023	50	220,000,000,000	8,464,004,574	20,000,000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21. 1. 1. ~ 2023. 12. 31. / 단위 : 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1	60,000	15,000,000	2,085,000	1,000,000
2022	500,000	10,000,000	2,592,857	2,000,000
2023	300,000	5,000,000	1,660,870	1,000,000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3. 1. 1. ~ 2023. 12. 31. / 단위 : 원)

침해유형 \ 조정액	인용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19	500,000	4,500,000	1,833,333	1,5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6	300,000	5,000,000	1,920,000	1,000,000	300,000
음성권 침해	1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기타	2	300,000	500,000	400,000	400,000	

③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침해 유형별로 2023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건을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1,279건(97.5%)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 19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전체 1,279건의 1.5%인 19건만이 금액 지급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반해, 명예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은 전체 33건의 27%인 9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이 인용되었다.

이를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해구제율(66%)과 비교해 분석하면, 실제 조정 절차에서 명예훼손 사건들은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권리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초상권, 성명권 침해 등의 사건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이 인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음성권 침해 사례로는 회사 관련 언론대응을 하던 신청인의 통화 내용이 사전 동의 없이 방송에 노출돼,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있었다.

사례 7.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

G언론사는 신청인이 재직 중인 회사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게 통화를 요청했다. 이후 G언론사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음성이 녹취된 동영상을 방송했다. 이에 신청인은 녹취 자체 및 내용 공개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의 음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의 음성을 삭제하고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구분 침해 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1,279 (100.0)	463 (36.2)	24 (1.9)	266 (20.8)	55 (4.3)	57 (4.5)	362 (28.3)	52 (4.1)
초상권	19 (100.0)	8 (42.1)	1 (5.3)	1 (5.3)			7 (36.8)	2 (10.5)
음성권	1 (100.0)	1 (100.0)						
성명권	3 (100.0)			1 (33.3)			1 (33.3)	1 (33.3)
프라이버시	2 (100.0)			2 (100.0)				
재산상손해	1 (100.0)	1 (100.0)						
기타	7 (100.0)	3 (42.9)			1 (14.3)	2 (28.6)	1 (14.3)	
계	1312 (100.0)	476 (36.3)	25 (1.9)	270 (20.6)	56 (4.3)	59 (4.5)	371 (28.3)	55 (4.2)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주간신문(51.5%), 방송(50.7%), 일간신문(50.3%) 등 전년과 동일하게 온라인 매체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취하된 사건 가운데 피해구제된 비율은 온라인 매체인 뉴스통신(36.2%), 인터넷신문(32.3%), 인터넷뉴스서비스(27.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도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기사의 열람 차단, 일부 열람차단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피신청인은 온라인 매체 특성상 신청인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매체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일간 신문		388	195	4	97	9	3	60	20
		(100.0)	(50.3)	(1.0)	(25.0)	(2.3)	(0.8)	(15.5)	(5.2)
주간 신문		99	51	5	27			13	3
		(100.0)	(51.5)	(5.1)	(27.3)			(13.1)	(3.0)
방 송		345	175	15	77	11	3	50	14
		(100.0)	(50.7)	(4.3)	(22.3)	(3.2)	(0.9)	(14.5)	(4.1)
잡 지		8	2	2	2			2	
		(100.0)	(25.0)	(25.0)	(25.0)			(25.0)	
뉴스통신		218	69	5	30	13	9	79	13
		(100.0)	(31.7)	(2.3)	(13.8)	(6.0)	(4.1)	(36.2)	(6.0)
인터넷신문		2,491	894	51	468	66	86	804	122
		(100.0)	(35.9)	(2.0)	(18.8)	(2.6)	(3.5)	(32.3)	(4.9)
인터넷뉴스 서비스		498	212	12	80	34	10	135	15
		(100.0)	(42.6)	(2.4)	(16.1)	(6.8)	(2.0)	(27.1)	(3.0)
기 타		38	1	1	12	12	2	9	1
		(100.0)	(2.6)	(2.6)	(31.6)	(31.6)	(5.3)	(23.7)	(2.6)
계		4,085	1,599	95	793	145	113	1,152	188
		(100.0)	(39.1)	(2.3)	(19.4)	(3.5)	(2.8)	(28.2)	(4.6)

* ()안의 숫자는 %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전체 4,085건의 사건 중 대다수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4,042건(전체 사건의 98.9%)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585건(39.2%)이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작년 명예훼손 사건의 조정성립 비율인 29.9%(924건)에 비해 9.3% 상승한 수치다. 명예훼손 사건의 조정성립 외 처리결과는 피해구제 되어 취하된 사건 1,141건(28.2%), 조정불성립 사건 788건(19.5%), 미구제 취하 185건(4.6%), 기각 140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구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4,042	1,585	93	788	140	110	1,141	185
	(100)	(39.2)	(2.3)	(19.5)	(3.5)	(2.7)	(28.2)	(4.6)
초상권 침해	21	8	1	2			8	2
	(100)	(38.1)	(4.8)	(9.5)			(38.1)	(9.5)
음성권 침해	1	1						
	(100)	(100)						
성명권 침해	3			1			1	1
	(100)			(33.3)			(33.3)	(33.3)
사생활 침해	3		1	2				
	(100)		(33.3)	(66.7)				
재산상 손해	4	2			2			
	(100)	(50.0)			(50.0)			
기타	11	3			3	3	2	
	(100)	(27.3)			(27.3)	(27.3)	(18.2)	
계	4,085	1,599	95	793	145	113	1,152	188
	(100)	(39.1)	(2.3)	(19.4)	(3.5)	(2.8)	(28.2)	(4.6)

* () 안의 숫자는 %

사례 8. 명예훼손

H언론사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서 신청인 단체가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현재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신청인 단체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게 보도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H언론사가 제목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신청인 측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9. 프라이버시

J언론사는 무인가 신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해당 학교의 소재 지역, 졸업사진, 제보자인 신청인이 신학교에서 겪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의도하지 않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J언론사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기사를 수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결정에 동의하였다.

사례 10. 저작권 침해

J언론사는 지역 간 복선전철이 KTX-이음 열차로 운용될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신청인이 제작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송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이 제작한 영상이 사전협의나 인용표시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영상 사용료 명목으로 J언론사가 신청인에게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도에서 신청인의 영상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6 신청인 유형별 처리 결과

전체 사건 중 개인이 청구한 비율이 '21년 60.1%, '22년 53.5%, '23년 54.5%로 지속적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청구 사건 2,225건 중 733건(32.9%)이 조정성립되었고, 689건(31.0%)이 열람차단 및 보도게재 등으로 피해구제 되어 취하되었으며, 470건(21.1%)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처리건수는 정치인, 개인사업가, 회사원, 연예인 등의 순이었고 조정성립율은 전문직 종사자(84.5%), 교육자(51.3%), 고위공무원 및 조합대표(50.0%) 등의 순이었다.

단체 유형별 조정성립율은 국가기관(53.2%), 일반단체(51.7%), 지자체 및 기업체(각 4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개인)

(2023. 1. 1. ~ 2023. 12. 31.)

신청인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정치인	414	139	14	142	1		105	13
	(100.0)	(33.6)	(3.4)	(34.3)	(0.2)		(25.4)	(3.1)
공공기관장	62	16		14			17	15
	(100.0)	(25.8)		(22.6)			(27.4)	(24.2)
고위공무원	14	7		2				5
	(100.0)	(50.0)		(14.3)				(35.7)
공무원	83	25		29			24	5
	(100.0)	(30.1)		(34.9)			(28.9)	(6.0)
전문직 종사자	103	87	1	7			7	1
	(100.0)	(84.5)	(1.0)	(6.8)			(6.8)	(1.0)
문화예술인	21	5		9		1	5	1
	(100.0)	(23.8)		(42.9)		(4.8)	(23.8)	(4.8)
종교인	15	6	4	2			3	
	(100.0)	(40.0)	(26.7)	(13.3)			(20.0)	
회사원	337	142		32	4	32	113	14
	(100.0)	(42.1)		(9.5)	(1.2)	(9.5)	(33.5)	(4.2)
언론인	176	32		22	74		45	3
	(100.0)	(18.2)		(12.5)	(42.0)		(25.6)	(1.7)
교육자	78	40		9	4		23	2
	(100.0)	(51.3)		(11.5)	(5.1)		(29.5)	(2.6)
개인사업가	407	103	11	34	6	46	198	9
	(100.0)	(25.3)	(2.7)	(8.4)	(1.5)	(11.3)	(48.6)	(2.2)
연예인	128	13		105			8	2
	(100.0)	(10.2)		(82.0)			(6.3)	(1.6)
학생	63	11		2	2		48	
	(100.0)	(17.5)		(3.2)	(3.2)		(76.2)	
시민활동가	53	20		18	1		12	2
	(100.0)	(37.7)		(34.0)	(1.9)		(22.6)	(3.8)

구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조합대표 (협회장)	54	27	6	7			5	9
	(100.0)	(50.0)	(11.1)	(13.0)			(9.3)	(16.7)
기타	217	60	11	36	22	2	76	10
	(100.0)	(27.6)	(5.1)	(16.6)	(10.1)	(0.9)	(35.0)	(4.6)
계	2,225	733	47	470	114	81	689	91
	(100.0)	(32.9)	(2.1)	(21.1)	(5.1)	(3.6)	(31.0)	(4.1)

* ()안의 숫자는 %

표 20.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단체)

(2023. 1. 1. ~ 2023. 12. 31.)

구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국가기관	77	41	4	23			9	
	(100)	(53.2)	(5.2)	(29.9)			(11.7)	
지자체	154	72	11	21			46	4
	(100)	(46.8)	(7.1)	(13.6)			(29.9)	(2.6)
공공단체	101	31		22			30	18
	(100)	(30.7)		(21.8)			(29.7)	(17.8)
일반단체	536	277	8	122	6		111	12
	(100)	(51.7)	(1.5)	(22.8)	(1.1)		(20.7)	(2.2)
종교단체	46	18	8	10	1		6	3
	(100)	(39.1)	(17.4)	(21.7)	(2.2)		(13.0)	(6.5)
기업체	757	354	13	95	18	32	192	53
	(100)	(46.8)	(1.7)	(12.5)	(2.4)	(4.2)	(25.4)	(7.0)
언론사	141	64	1	11	6		58	1
	(100)	(45.4)	(0.7)	(7.8)	(4.3)		(41.1)	(0.7)
교육기관	48	9	3	19			11	6
	(100)	(18.8)	(6.3)	(39.6)			(22.9)	(12.5)

신청인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계	1,860	866	48	323	31	32	463	97
	(100)	(46.6)	(2.6)	(17.4)	(1.7)	(1.7)	(24.9)	(5.2)

* ()안의 숫자는 %

7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전체 사건의 76.2%(3,114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재부 사건은 '21년 69.4%(2,969건), '22년 74.9%(2,377건)로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중재부의 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38.5%(1,198건), 당사자간 협의나 화해가 이뤄져 취하로 피해 구제된 것이 28.4%(883건), 조정불성립 20.1%(6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외 기각 4.4%(137건), 피해구제 없는 미구제 취하 3.7%(114건), 각하 3.4%(106건), 직권조정결정 1.6%(50건) 순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한편, 지역중재부(전체 사건의 23.8%, 971건)의 경우 서울중재부와 마찬가지로 조정성립으로 처리된 사건이 41.3%(401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구제된 취하 사건 27.7%(269건), 조정불성립 17.2%(167건) 순으로 서울중재부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 외 직권조정결정 4.6%(45건), 기각 0.8%(8건), 각하 0.7%(7건)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중재부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중재부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서울	3,114	1,198	50	626	137	106	883	114
	(100.0)	(38.5)	(1.6)	(20.1)	(4.4)	(3.4)	(28.4)	(3.7)
부산	23	18		2		1	2	
	(100.0)	(78.3)		(8.7)		(4.3)	(8.7)	

중재부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취 하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구제	미구제
대구		123	51	2	30			15	25
		(100.0)	(41.5)	(1.6)	(24.4)			(12.2)	(20.3)
광주		117	73	21	11			6	6
		(100.0)	(62.4)	(17.9)	(9.4)			(5.1)	(5.1)
대전		67	6		8		6	45	2
		(100.0)	(9.0)		(11.9)		(9.0)	(67.2)	(3.0)
경기		357	118	10	77	7		123	22
		(100.0)	(33.1)	(2.8)	(21.6)	(2.0)		(34.5)	(6.2)
강원		33	11	4	13			5	
		(100.0)	(33.3)	(12.1)	(39.4)			(15.2)	
충북		82	16	4	12			42	8
		(100.0)	(19.5)	(4.9)	(14.6)			(51.2)	(9.8)
전북		98	74	1	6			9	8
		(100.0)	(75.5)	(1.0)	(6.1)			(9.2)	(8.2)
경남		58	24	3	8	1		20	2
		(100.0)	(41.4)	(5.2)	(13.8)	(1.7)		(34.5)	(3.4)
제주		13	10					2	1
		(100.0)	(76.9)					(15.4)	(7.7)
계		4,085	1,599	95	793	145	113	1,152	188
		(100)	(39.1)	(2.3)	(19.4)	(3.5)	(2.8)	(28.2)	(4.6)

* () 안의 숫자는 %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이용자의 뉴스 소비 형태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뉴스를 주로 소비하던 전통적 형태에서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소비를 거쳐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뉴스 소비로 그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 생산 방식 또한 이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비단 기존 방송사들뿐만 아니라 신문사들 또한 자사의 SNS,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인쇄 작업을 통해 비교적 느린 속도로 생산·소비되던 텍스트 형태의 언론 보도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소비되는 형태의 보도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와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방안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조정 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사)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개인 유튜브·일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신청인의 91.7%, 피신청인의 82.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정/열람차단(삭제) 청구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95.3%, 피신청인의 6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전통적 피해구제 방식인 정정·반론·추후보도, 손해배상에 더해 기사 수정/삭제 청구권의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의 개념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조정 대상을 폭넓게 포섭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 뉴스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유튜브 보도 또한 조정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 또한 본격적으로 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2009년에 포털 등을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개정된 이후로 1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스마트폰의 보급, 유튜브를 필두로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확산 등 전반적 언론 환경은 2009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했다. 위원회의 실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이 격변하는 언론 환경을 대변할 수 있게끔 개정되지 못한다면 실효적인 피해구제책 마련에는 현실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chat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검색엔진 기술의 발달, AI 기술 발전을 통한 AI 기자 보편화 등으로 미디어 환경의 구조가 또 다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러한 기술 발전의 그늘로 ‘딥페이크’ 합성으로 인한 인격권 피해, AI 기자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 등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 또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렇듯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례 11.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1

K언론사는 불법 영업 홀덤펍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 내부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다. 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점이 불법 도박과 관련된 것처럼 인식돼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K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를 열람 차단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재된 보도 영상에 나온 신청인 업체의 표식들을 모두 불러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2.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2

L언론사는 신청인 기관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공익 광고의 조회수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신청인 기관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신청인 기관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L언론사 홈페이지, L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네이버TV 등에 게재된 보도 영상의 설명란에도 함께 업로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제4절 | 평가

2023년 위원회는 전년 3,175건에서 크게 증가한 총 4,085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고, 조정사건의 피해구제를 또한 최근 5년간 피해구제율 중 가장 높은 수치(74.1%)를 기록하였다. 한편, 언론조정 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가 76.6점, 피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가 75.8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신청인은 1.3점 하락하고, 피신청인은 1.0점 상승한 수치이다.

위원회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상승한 주요 원인은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의 증가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위 현상과 더불어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유사 보도가 다수 매체에 반복 게재되면서 동일 신청인이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량 신청 사건은 사건 처리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3년 12월말 기준 조정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약 21.5일로 전년도 평균 처리기간인 14.8일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재부가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처리기한인 14일을 넘기고 있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해마다 증가하는 조정사건의 신속한 사건 해결과 더불어 당사자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충실한 심리진행을 위해서 중재위원 정원 증원 및 중재부 증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재부 증설을 포함해 다량 신청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해 해마다 늘어나는 유튜브 영상물 관련 피해구제를 위해 소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관련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실무적 처리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 뉴스플랫폼으로 인한 피해구제현황을 공유하고, 동영상 매체의 특성을 감안한 피해구제방법과 사례를 축적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위원회는 언론중재법상의 추후보도청구 요건 판단과 실무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정 전 판결 등에 대해서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무죄나 무혐의가 확인된다면 추후보도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행정처분 보도와 관련해서도 가급적 본안심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이용만족도 향상과 피해구제 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시설을 개선하였다.

2024년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안 위주의 단계별 입법 추진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 관련 피해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량 신청 사건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미디어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심리 절차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실질적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제2장

시정권고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제1절 | 개요

시정권고는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등 언론의 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침해 사항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를 통한 법익 침해가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수정 혹은 삭제가 불가한 지면 매체에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수정 혹은 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매체에는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비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를 침해 유형 별로 안내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정권고 모니터링 매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바탕으로 ①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시사성 기사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법익 침해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범위 및 정도(매체 인지도, 포털검색 제휴여부 등), ③정기적 발행 여부 및 기사 제공 빈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위원회는 매체의 심의 적합성을 반기별로 검토,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시정권고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로, 위원회는 시정권고제도를 통해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보호를 위해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법익 침해를 예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제2절 | 주요 추진실적

1 시정권고 현황

2023년 위원회는 총 2,716개의 매체를 모니터링 하여, 411개의 매체를 대상으로 1,158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1,158건의 시정권고 결정 중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결정이 1,070건(92.4%)이었고, 이 중 언론사가 시정권고 결정을 수용하여 수정 혹은 삭제한 경우(이하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는 697건으로 집계되어 65.1%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에는 시정권고심의 모니터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 감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22. 2023년도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

(2023. 1. 1. ~ 12. 31.)

수용여부	수용		불수용	계
	수정	삭제		
결정건수(%)	441(41.2%)	256(23.9%)	373(34.9%)	1,070(100%)
	697(65.1%)			

2 침해 유형별 분석

2023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 금지'가 286건(2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사생활 보호 등' 270건(23.3%), '자살 관련 보도' 208건(18.0%), 기사형 광고 126건(10.9%), 충격·혐오감 78건(6.7%), 아동학대사건보도 54건(4.7%) 등의 순이었다. 작년 대비 '차별 금지'에 대한 시정 권고 결정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차별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이래 언론계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자정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23.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침해 유형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보호 등	명예 훼손 금지	범죄 사건 보도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신고자 등 보호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범죄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미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여론 조사 보도		기사형 광고
2021	1,291 (100)	517 (40.0)		101 (7.8)	70 (5.4)	1 (0.1)			4 (0.3)		29 (2.3)	34 (2.6)	156 (12.1)	47 (3.6)	29 (2.3)	31 (2.4)	39 (3.0)	182 (14.1)	51 (4.0)
2022	1,239 (100)	514 (41.5)	19 (1.5)	56 (4.5)	21 (1.7)		12 (1.0)	52 (4.2)	50 (4.0)	20 (1.6)	41 (3.3)	21 (1.7)	108 (8.7)	8 (0.6)	16 (1.3)	33 (2.7)		209 (16.9)	59 (4.8)
2023	1,158 (100)	270 (23.3)		45 (3.9)			54 (4.7)		286 (24.7)		27 (2.3)	9 (0.8)	208 (18.0)	35 (3.0)	1 (0.1)	78 (6.7)		126 (10.9)	19 (1.6)

* ()안의 숫자는 %

가. 사생활 보호 등

2023년 ‘사생활 보호 등’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270건으로, 전체의 23.3%이다. 위원회는 공적 인물,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인(私人)인 가족의 초상 등을 공표한 보도, 사건·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인물의 초상, 성명, 사생활 등을 과도하게 공개한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한 연예에는 프로그램 방송 후 출연자 간 불거진 사생활 폭로 양상에 대한 보도에서, 출연자가 폭로한 사적 통신 내용을 매체가 여과 없이 공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폭로 속 당사자가 스스로 방송에 출연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는 없으며, 명백히 사생활에 관한 내용인 통신내역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나. 아동학대사건 보도

2023년 ‘아동학대사건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4.7%이다. ‘아동학대사건 보도’는 2021년 신설된 시정권고 심의 조항으로, 소년보호사건,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 성폭력범죄 사건 외의 일반적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및 관련자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됐다. 위원회는 아동 학대 의혹을 받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의붓딸에게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으로 논란이 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보도하면서, 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성추행 등의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영상을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문제

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위원회는 해당 장면을 재공표하는 것이 공익 목적 달성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학대 의혹을 받는 아동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그 정황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해당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례. 사생활 보호 등

[SC이슈] "여자 3명과 잤다"..."나는솔로" [] 영숙, 상철 '19금문자' 여성편력 폭로


나는 솔로 [] 영숙이 상철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 상철을 공개 자각했다.

영숙은 20일 자신의 개인계정에 "눈은 저질 따국인 놀이. 순진한 척 그만하고, 카톡 확인기 해서 날 모함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를 안했지. 덕분에 정보 받은 거 같 오를참고 너무 더럽고 소름끼쳐서 디포문 내용공개하여 상철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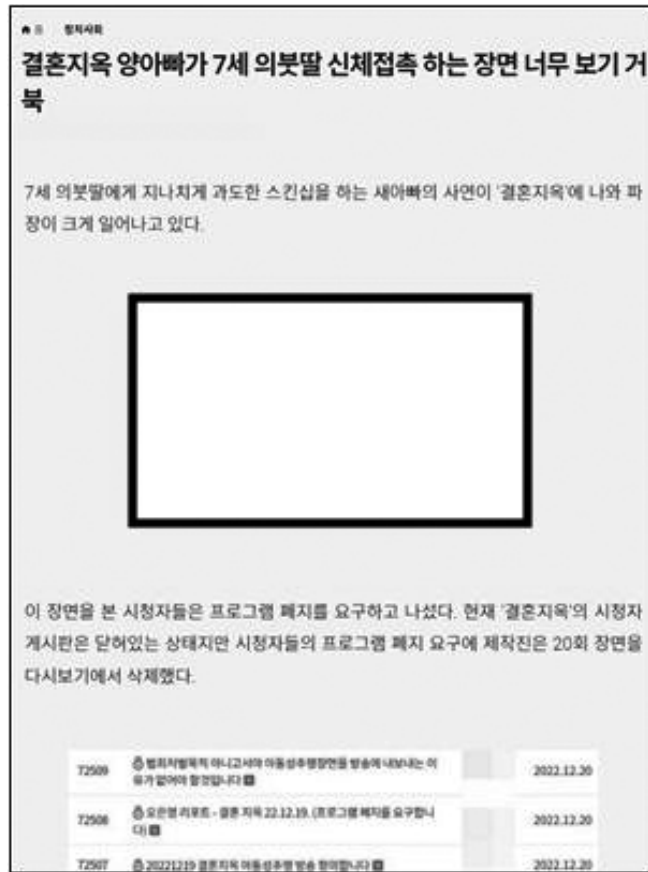
우선 영숙이 방송에서 상철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공개됐다. 상철은 영숙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이 문제로 전남편과 완전한 연을 끊을 수 없는 영숙의 상황 때문에 힘든 마음을 수차례 토로했고, 영숙은 '아이 없는 다른 사람 만나라'며 이별을 고했다. 여기까지는 방송에도 나왔던 부분.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40여장에 달하는 법치분에 따르면 상철은 영숙에게 일명 '19금 율리랑'을 했다. '너와 관계하는 정면을 상상한다' '백시하다'며 노골적으로 대서했고, 자신의 과거 성행위과 이상 교제 경험까지 공개했다. 영숙은 '정신 차려라'라며 선을 긋기도 했지만, 상철은 '미국에서는 그렇다'며 19금 드립을 떨치지 않았다.



- ☑ 한 연애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갈등에 대해 보도하면서, 출연자가 폭로한 통신 내역을 여과 없이 공표
-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



- ☑ 의붓딸에게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으로 논란이 된 방송프로그램을 보도하면서, 해당 장면을 공표
-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

다. 차별 금지

2023년 ‘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286건으로, 전체의 24.7%이다. 이는 2022년의 5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중 상당수는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결정 장애’, ‘절름발이 제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였다. 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통해 언론 보도에서 관용적으로 언급되는 장애 차별적 표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사례3. 차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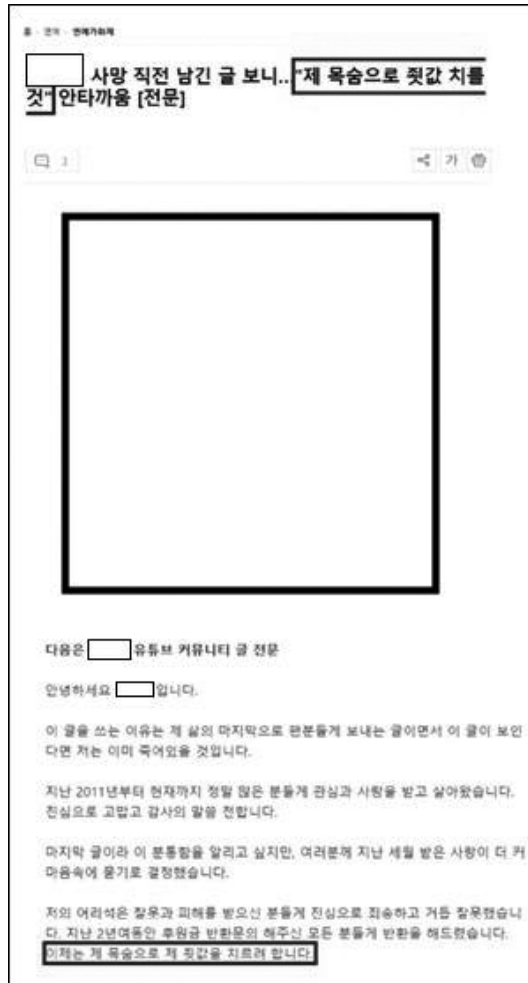


☞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여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라. 자살 보도

2023년 '자살 관련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208건으로, 전체의 18.0%이다. 이는 2022년의 108건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결과이며, 이 중 상당수는 공직자나 유명인의 자살에 관한 보도였다. 위원회는 자살자의 신상 정보, 사생활 등을 공표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유명인의 자살이 자살 위기에 노출된 일부 독자들에게 모방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살의 동기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보도,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한 보도,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도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례4. 자살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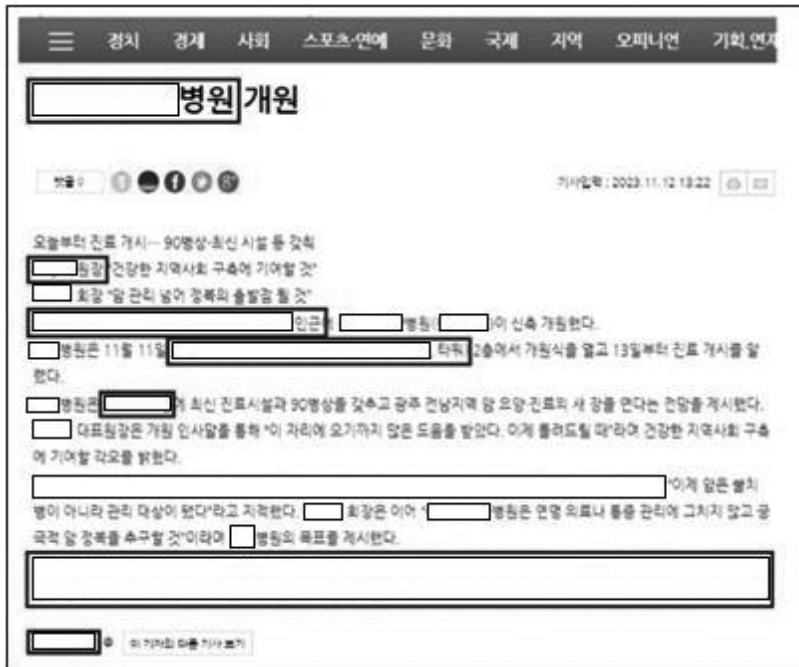


- ☑ 유명 가수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가수가 온라인에 남긴 유서 성격 게시물 속 특정 문구를 여과 없이 공표. 해당 문구는 당사자가 속죄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처럼 자살을 미화하거나,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

마. 기사형 광고

2023년 '기사형 광고'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126건, 전체의 10.9%로 2022년의 209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결과이다.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독자들은 해당 광고에 대해 기사에 준하는 신뢰를 가지게 되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관련 기사형 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과장된 정보를 사실로 오인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바이라인과 함께 기사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사례5. 기사형 광고



- ☑ 모 병원의 개원 정보를 기사 형식으로 보도
-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

3 매체 유형별 분석

2023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이 1,007건(87.0%)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지 83건(7.2%), 뉴스통신 63건(5.4%) 순이었다. 최근 3년간의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결정 통계에 의하면,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의 비율이 계속해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쇄 매체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기반 매체는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확산시키는 반면 기사의 수정 및 삭제가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법익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매체에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자발적 조치(비 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를 안내하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매체의 시정 권고 수용률은 65.1%(2023년 기준)정도로, 관련 조치(비 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도의 공유 등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표 2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1. 1. 1. ~ 2023. 12. 31.)

구분 연도	총계	매체 유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21	1,291 (100)	8 (0.6)	32 (2.5)	2 (0.2)	1 (0.1)	73 (5.6)	1,172 (90.8)	3 (0.2)
2022	1,239 (100)	21 (1.7)	44 (3.6)	3 (0.2)		81 (6.5)	1,083 (87.4)	7 (0.6)
2023	1,158 (100)	29 (2.5)	54 (4.7)	5 (0.4)		63 (5.4)	1,007 (87)	

4 법익 침해 반복 언론사에 대한 조치

2023년 시정권고 결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매체는 인터넷 신문 9곳, 뉴스 통신 1곳이다. 상위 10개 매체가 받은 시정권고 결정은 총 221건으로, 전체 결정건수인 1,158건의 19.0%에 해당한다. 한 해 동안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전체 매체가 411곳임을 감안할 때, 상위 10개 매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는 법익 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에 반기별로 시정권고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언론사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제3절 | 평가

2023년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건수는 1,158건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중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1,0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매체의 속성상 여러 언론사들이 유사한 내용을 경쟁적으로 보도하여 법익침해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심의로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2023년에는 특히 차별적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애 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에 대해 꾸준히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의 관점에서 관련 심의기준을 점검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며, 향후에도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부처의 보도 가이드라인을 심의 기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시정권고 결정에 따라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비율, 즉 수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시정권고의 취지와 근거를 언론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위반유형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고 있으며,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언론 사별, 침해유형별 수용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분석의 기준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법익침해와 관련한 이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재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엄격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진의 심의역량을 강화하며 유관기관의 심의 사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시정권고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제3장

선거기사심의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제1절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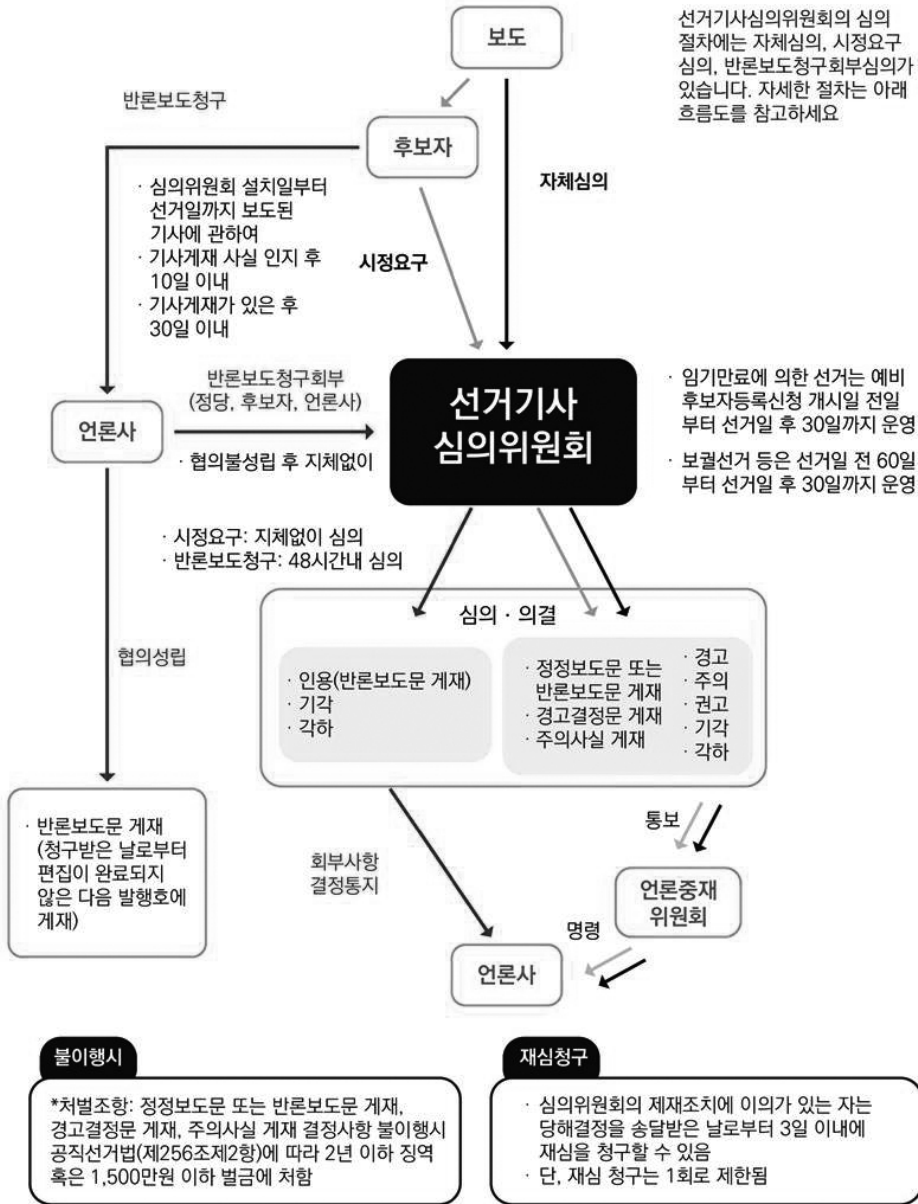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사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심의유형은 자체심의,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체심의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선심위가 해당 선거기사의 불공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시정요구심의를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시정을 요구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의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청구인과 언론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나 언론사는 이를 선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선심위는 위 세 가지 유형의 심의를 거친 모든 결정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재조치가 결정된 언론사에 선심위 결정 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언론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재·보궐선거 선심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심의대상매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의인력 간 업무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실무적으로 체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선거기사심의팀이 시정권고제도와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심의 제도를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다.

■ 심의절차



제2절 | 주요 추진실적

1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가. 설치·운영

위원회는 2023년 4월 5일 실시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하여 2023년 2월 4일부터 2023년 5월 5일까지 약 3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표 25.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김선중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최수호	YTN 해설위원실장(국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정민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	국민의힘
	이은식	총북 선관위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진성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법학회
	김대광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지해범	조선일보 베이징특파원 및 국제부장	한국신문협회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는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총 9곳)

국회의원	1	전북 전주시울
지방자치 단체의 장	1	경남 창녕군수
지방의회 의원	6	경북 구미시, 경남 창녕군, 울산 남구, 충북 청주상당구,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북구
교육감	1	울산 교육감

나. 심의·의결현황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141개(중앙일간지 22개, 지역일간지 51개, 중앙주간지 29개, 지역주간지 18개, 월간지 9개, 뉴스통신 12개)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보도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총 7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안건 7건 가운데, 경고 2건(28.6%), 주의 5건(71.4%)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85.7%),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1건(14.3%)이었으며, 보도 유형별로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 4건(57.1%), 일반 선거기사 2건(28.6%),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보도가 1건(14.3%)을 차지하였다.

한편 매체유형을 분석한 결과, 자체심의 안건 7건(100%) 모두 지역일간지였다. 이는 선거가 열리는 지역에 따라 관심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재·보궐선거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7건의 자체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후보자의 시정요구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표 26.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자체심의 (2023. 2. 4~2023. 5. 5.)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지역 일간지	7 (100)	6 (85.7)	1 (14.3)	0 (0.0)	2 (28.6)	1 (14.3)	0 (0.0)	0 (0.0)	4 (57.1)	0 (0.0)	0 (0.0)	0 (0.0)	2 (28.6)	5 (71.4)	0 (0.0)	0 (0.0)
계	7 (100)	6 (85.7)	1 (14.3)	0 (0.0)	2 (28.6)	1 (14.3)	0 (0.0)	0 (0.0)	4 (57.1)	0 (0.0)	0 (0.0)	0 (0.0)	2 (28.6)	5 (71.4)	0 (0.0)	0 (0.0)

사례 1.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 사례)

파란만장 울산 교육감 선거사와 새 울산교육 원년화



이승연 사회체육사

제1대 교육감 김석기 후보도 제9대 최 노옥 교육감까지 파란만장한 선거역사 보여줘

다음달 5일 보궐선거 앞두고 보수진영은 단일화 이휘근 캠프 후보진영은 구광범·원장수 후보 단일화 결실하게 생각하는 중

올해 '교육개혁 원년' 맞이해 부패·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새로운 교육감 간결히 바라

울산은 2023년 4월 5일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글이 울산 교육감 선거역사 대만의 관심을 환기하고, 표표를 높이 새로운 울산교육의 원년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시대를 거쳐 두 번의 선거로 치러져 왔다. 1993.11.11 교육감의 당선으로 시작된 울산 교육감 선거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보여준다. 김석기 교육감의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권대행 체제, 제2대 김석기 교육감은 재임 중 사망으로 권대행 체제로 전향되었고, 제3대 최만규 교육감이 유일하게 4년 임기를 마쳤다.

다시 제2대 김석기 교육감이 당선 되었지만 불과 10일 만에 다시 권대행 체제로 돌아갔다. 제2대부터는 간선에서 주민직선제로 바뀌어 김성만 교육감(07.12.20-10.6.30)이 잔여 임기를 청산하였고, 제2대 김석기 교육감이 4년 임기 후 제3대 교육감(14.7.1-17.12.31)에 재선되었으나 구속이 되면서 다시 권대행 체제로 전향되었다. 제4대 교육감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보궐선거로 노옥희가 당선되어 4년의 임기를 마쳤다. 노옥희 교육감은 재선에 도전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재임 중 사망으로 최두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안국숙이 울산 교육감 선거의 한 주 소이다.

이번 보궐선거도 당직은 없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의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경쟁의 예비후보가 선거전열을 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이강철 예비후보가 건강상 이유로 사퇴함으로써 보수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진보진영에서는 김주홍 예비후보

가, 진보 진영에서는 원장수와 구광범 예비후보가 각각 뛰고 있다. 김예비후보는 지난해 진보정당의 노옥희 후보와 경쟁하여 약 45%의 득표를 했지만 낙선한 경향이 있다. 제1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리계 되는 보궐선거인지만 보수성향 갑주홍을 겨루고 있다. 보수정당의 구예비후보도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11.38%의 득표를 달성하며 완주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구예비후보는 노옥희 후보를 꺾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예비후보는 진보의 단일화를 제안하고 한예비후보는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보수정당이 김예비후보 한 사람으로 압축되면서 진보 진영에서도 단일화를 절실하게 생각하는 중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보정당의 한 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하였지만, 울산 시민에게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다. 단선 이전 교육감의 후임과 동종에 기대면서 부인의 교육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소위 부부 교감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울산에서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1998년 지방선거 때 노봉계 후보로 출구정장에 당선된 김창현 씨가 '청년위원회' 시간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형된 뒤 그들 사이 아내 이영순 씨가 출구정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었다. 소위 부부 구형이 되었다. 당시에도 "부부세움" "부부가다 해 맥스나"라는 비방과 따가운 시선

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한예비후보 부부도 많은 사람이 2년 전의 기억을 소환한다는 말이 들린다. 아내가 남편의 지리를 대안하거나, 남편이 아내의 지리를 이어간다는 것은 정치 행태로도 교육에서도 결코 바람직 못한 것이다.

교육부의 정책 방향인 교육혁신의 원년과 울산의 새로운 교육 원년을 위해서는 학교 교사들이는 이휘근으로 가는 것이다. 구광범 후보의 유은은 시각으로는 대울산교육을 이끌 수 없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울산교육의 대안들을 접할 수 없다. 타학이 동류성이 호소하여 교육의 양성이 되는 수를 위해서는 안된다. 부부라고는 하여 교육철학이나 신념이 같을 수는 없으며, 아내의 정책을 따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울산 교육감 선거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반추해 보면 단선형 정치는 불가능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래 교육은 부부 구형도 되는 것이 아니다. 보수진영의 교육감은 이제 과거의 오욕을 잊고, 산과나 그리고 리그 세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울산교육, 이제 부패의 과거를 청산하고, 부패 부패와 이휘근 원년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울산 시민은 기대하고 있다.

*여부 기사는 취재팀 담당자가 확인하였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가족관계와 이력에 근거해 해당 후보자가 교육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내용의 외부필진의 칼럼을 게재하여 경고를 결정

사례 2.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주의 사례)

창녕군수 보궐선거, 열기 '후끈'...후보군 관심

후보군 5~7명 국민의힘 소속 '무공헌 요구' 목소리 높아
한정우 전 군수, 가장 지지 ↑
청렴·정직·도덕성 가장 중요

지난달 9일 창녕군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해 4월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지대한 관심이 몰리며 언론 내리는 후보군들이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창녕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부영 전 군수가 갑자기 숨지면서 지난 6·1지방선거 후 불과 10개월만인 4월 5일 다시 군수를 뽑는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실감이나 큰 창녕군민들의 민심 종합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일 창녕군민 5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후보가 거론된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한정우 전 군수 19.8%로 1위를 기록했다. 한정우 전 군수 19.8%, 상낙인 현 도의원 15.5%, 권유관 전 도의원 10.8%, 박상재 현 도의원 10%, 권대행 8.7%, 김춘석 2.1% 이상주 1.7% 순이다.

이여 지지후보 없다 9.1%, 잘못됨 7.2%로 나타났다. 한정우 전 창녕군수는 자서전을 배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김춘석 전 군수의 역 시 공판정할 혐의도 선거법 위반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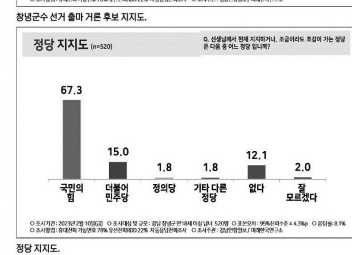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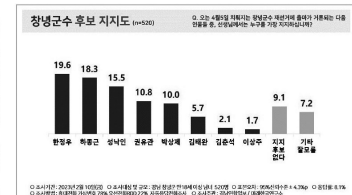
한정우 전 군수는 현직 군수였던 지난 2007년 뇌물수수로 1년4개월만에 사퇴했다. 상낙인 현 경남도의회는 창녕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도의원 사퇴 기자회견을 13일 가질 예정이다. 이에 공석이 된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의원의 선거비용은 3억여원이며 경남도가 충당해야 한다. 여러 혐의로 군수직을 그만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들이 다시 군수직에 도전할 뜻을 밝히면서 후보 공천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군민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다.

지지 후보 선택 주요 기준은 청렴·정직 20.4%가 28%로 가장 높았다. 군민들의 소통 능력 21.1%, 변화와 혁신의 역량 15.6%, 양과 11.7%, 정치적 정통 8.2%,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 8.0%, 기타 3.5%, 필요성 3.7% 순이다. 창녕 지지도는 국민의힘 67.3%, 더불어민주당 15%, 정의당 1.8%로 기록

다. 또, 기타 다른 정당 1.8%, 지지정당 없다 12.1%, 잘못됨 2.0%로 나타났다. 12일차 선출에 창녕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1명은 박상재 전 경남도의원, 한정우 전 창녕군수, 권유관 전 경남도의원, 김춘석 전 창녕군의원, 이상주 전 창녕군의회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법원1주당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미정한 후보를 찾지 못했다. 특히 이번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군수의 권위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책임이 국민 의의에 있고,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도 행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남연합일보,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PNR 퍼리뷰네트웍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 경남 창녕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20명(응답률 81.9%)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70%, 유선전화RDD 22% 자동응답 조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4.5%(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상기/기/차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기사를 1면 상단에 부각 보도하여 주의의를 결정함

가. 설치·운영

위원회는 2023년 10월 11일 실시된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하여 2023년 8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곳은 ‘서울 강서구청장’이 유일했는데, 이는 재·보궐선거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단 한 곳에서만 선거가 실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다만 보궐선거 실시 사유(피선거권상실)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쟁이 격화된 점, 해당 선거를 다가오는 제22대 국선의 ‘바로미터’로 보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점 등에서 결코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심창섭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식	충북 선관위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최용근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대회	공정언론국민연대 감사	국민의힘
	홍중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	한국언론학회
	김동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문현숙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한국기자협회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문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1곳)

지방자치 단체의 장	1	서울 강서구청장
------------	---	----------

나. 심의·의결현황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90개(중앙일간지 22개, 지역일간지 20개, 중앙주간지 27개, 지역주간지 1개, 월간지 8개, 뉴스통신 12개)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보도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총 3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안건 3건 가운데, 주의 2건(66.7%), 권고 1건(33.3%)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3건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보도 유형별로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이 2건(66.7%), 일반 선거기사가 1건(33.3%)을 차지하였다.

한편, 매체 유형별로는 뉴스통신이 2건(66.7%)이었고, 지역일간지가 1건(33.3%)이었다.

3건의 자체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후보자의 시정요구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표 27.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자체심의 (2023. 8. 12. ~ 2023. 11. 10.)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지역 일간지	1 (100)	1 (100)						1 (100)						1 (100)		
뉴스 통신	2 (100)	2 (100)			1 (50.0)			1 (50.0)						1 (50.0)	1 (50.0)	
계	3 (100)	3 (100)			1 (33.3)			2 (66.7)						2 (66.7)	1 (33.3)	

3 선심위 운영의 체계성·전문성 제고

위원회는 두 차례 재·보궐선거 선심위를 운영함에 있어 선거의 종류(교육감, 국회의원 등) 및 선거구별 특징을 고려하여 심의대상매체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선거보도가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게재 시기와 빈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모니터링 전문 심의인력을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1명 채용하여 과거 선심위 결정 사례와 타 심의기구(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결정 현황 등을 참고하도록 하여 심의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하반기에 채용한 모니터링 요원의 경우, 2024년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니터링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기 선거에 있어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심의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 제도에 대한 교육 수요를 파악, 주요 사례들을 담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2024년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공정 선거보도를 예방하기 위해 언론인 등을 상대로 전문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최근 선거(대선, 지선 등)를 치르며 축적된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이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알기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



또한 위원회는 두 차례 재·보궐선거 선심위 출범에 맞추어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함과 더불어, 심의대상매체에 공정한 선거보도를 당부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과 함께 <알기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 책자를 발송함으로써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언론사의 부주의로 심의기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등 대외적으로 위원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선심위의 존재를 홍보하고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제3절 | 평가

위원회는 2023년 두 차례의 재·보궐선거의 선심위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비록 지난 해 있었던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의 규모나 국민적 관심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반감된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그 경중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심위를 운영하며 전문성과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를 통해 총 7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에서는 총 3건의 의결 건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칼럼 및 기고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담아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가 60%(6건)에 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칼럼 및 기고문 등은 일반 기사에 비해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심위의 제재조치를 받은 6개의 안건들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외부 필진의 의견을 피력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적인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로, 이러한 사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원회는 선심위를 운영하고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단순히 안건 자체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도의 경위, 내용의 진위 여부, 기존 심의 사례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심의업무의 일관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힘썼으며, 실무진과 심의인력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현황과 선거 관련 각종 현안을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심의기구 간 제재조치와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기구별로 결정·공표한 심의기준 위반 사례, 후보자 시정요구 현황, 선거 관련 이슈 등을 파악하고자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2024년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심위를 운영하기 위해 심의인력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심의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선거기사심의시스템을 개선하고 심의대상매체의 구독과 관리에 있어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정권고제도와 선거기사심의제도를 널리 알리고 교육 수요를 창출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대외적으로 심의제도를 홍보하고 선도적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2023 ANNUAL REPORT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ART

3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제1장 언론피해 상담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실적
- 제3절 평가

제2장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제3절 평가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제3절 평가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조사결과
- 제3절 평가

제5장 홍보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제3절 평가

제6장 기타 주요활동

-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 전산 시스템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구축

제장

언론피해 상담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제1절 | 개요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둘러싼 다각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업무는 조정·중재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서부터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에서 파생한 부차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2023년 위원회 상담 총 건수는 작년 대비 대폭 증가한 3,995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666건이 늘어났다. 2022년도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대형 이슈로 상담건수가 다소 줄었던 반면, 2023년도에는 사회갈등이 비등하고 허위정보나 오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언론보도를 둘러싼 상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해구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조정심리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그간 미비했던 장애인의 위원회 접근성 문제를 개선했다. 이에 조정절차 접자안내문을 팸플릿과 점자프린터 파일 형태로 제작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조정심리 진행을 위해 상담단계에서 수어·문자통역, 휠체어 등지원이 가능한 점을 안내·공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제2절 | 주요 실적

1 상담경로

상담경로는 전화가 3,272건(81.9%)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신문고 421건(10.5%), 이메일 149건(3.7%), 방문 104건(2.6%), 인터넷 게시판 34건(0.9%)이 뒤를 이었다.

전화와 국민신문고, 그리고 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과 달리 방문 상담의 경우 소폭 하락했을 뿐 아니라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비대면 상담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28. 상담경로

(2021. 1. 1. ~ 2023. 12. 31.)

구분 상담건수 연도	상담경로						
	전화	방문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국민 신문고	기타	
2021	3,863 (100)	3,054 (79.1)	132 (3.4)	147 (3.8)	120 (3.1)	393 (10.2)	17 (0.4)
2022	3,329 (100)	2,854 (85.7)	108 (3.2)	54 (1.6)	44 (1.3)	266 (8.0)	3 (0.1)
2023	3,995 (100)	3,272 (81.9)	104 (2.6)	34 (0.9)	149 (3.7)	421 (10.5)	15 (0.4)

※ () 안의 숫자는 %

2 상담 처리결과

유형별 상담 처리결과는 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조정절차 안내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조정절차 안내는 2023년에는 3,708건으로 2022년 3,026건에 비해 682건이 치솟았고 그 외 타 기관 안내와 소송 및 고소·고발 안내가 각각 456건(9.9%), 264건(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 안내의 경우 전체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과 다르게 그 건수와 비중이 줄었는데, 상담신청인이 위원회와 유사 민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9. 상담 처리결과

(2021. 1. 1. ~ 2023. 12. 31.)

구분 상담건수 연도		상담 처리결과					
		조정절차 안내	소송 및 고소·고발 안내	기타 위원회 업무 안내	타 기관 안내	기타	총계
2021	3,863	3,653 (76.4)	235 (4.9)	38 (0.8)	552 (11.5)	303 (6.3)	4,781 (100)
2022	3,329	3,026 (73.8)	256 (6.2)	35 (0.9)	573 (14.0)	208 (5.1)	4,098 (100)
2023	3,995	3,708 (80.5)	264 (5.7)	15 (0.3)	456 (9.9)	165 (3.6)	4,608 (100)

※ () 안의 숫자는 %

※ 복수 답변 시, 개별유형을 모두 집계한 것이므로 총계가 상담건수보다 많음

※ 기타는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 안내를 의미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명예훼손이 주요 피해유형이었던 점은 2023년에도 동일했다. 명예훼손 상담 건수는 3,365건(80.9%)이고, 기타를 제외하면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 176건(4.2%), 재산상 손해 73건(1.8%), 사생활 침해 52건(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업무와 무관한 기타 유형의 상담이 2022년에는 300여 건, 2023년에는 100여 건이 줄어들어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30.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021. 1. 1. ~ 2023. 12. 31.)

구분 상담건수 연도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총계
2021	3,863	2,918 (67.2)	291 (6.7)	90 (2.1)	113 (2.6)	929 (21.4)	4,341 (100)
2022	3,329	2,559 (71.0)	213 (5.9)	148 (4.1)	77 (2.1)	608 (16.9)	3,605 (100)

구분 상담건수 연도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총계
2023	3,995	3,365 (80.9)	176 (4.2)	52 (1.3)	73 (1.8)	493 (11.9)	4,159 (100)

※ () 안의 숫자는 %

※ 피해유형은 중복 응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 처리결과의 총계가 불일치

※ 2021년부터 피해 유형 중복 시 별도 집계하여 총계 산출

4 상담매체 유형

상담 대상 매체는 기타와 불명을 제외하면 인터넷신문 2,285건(40.4%), 방송 865건(15.3%), 인터넷 뉴스서비스 666건(11.8%), 일간신문 423건(7.5%), 뉴스통신 295건(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을 상대로 한 상담의 비중을 합하면 60%에 육박해 향후 인터넷 관련 기사가 주된 상담대상 매체인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31. 상담매체 유형

(2021. 1. 1. ~ 2023. 12. 31.)

구분 상담 건수 연도		상담매체 유형										총계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방송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인터넷 뉴스 서비스	기타	불명	
2021	3,863	343 (6.7)	114 (2.2)	710 (13.9)	7 (0.1)	241 (4.7)	2,217 (43.4)	2 (0.0)	470 (9.2)	18 (0.4)	984 (19.3)	5,106 (100)
2022	3,329	267 (5.9)	100 (2.2)	713 (15.8)	6 (0.1)	172 (3.8)	1,824 (40.5)	1 (0.0)	477 (10.6)	152 (3.4)	795 (17.6)	4,507 (100)
2023	3,995	423 (7.5)	128 (2.3)	865 (15.3)	12 (0.2)	295 (5.2)	2,285 (40.4)	-	666 (11.8)	172 (3.0)	809 (14.3)	5,655 (100)

※ () 안의 숫자는 %

※ 매체유형은 중복 응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총계가 불일치

5

상담신청인 유형

상담신청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2,637건(66.0%), 회사 522건(13.1%), 일반단체 364건(9.1%), 지자체 및 공공단체 291건(7.3%), 국가기관 119건(3.0%), 교육기관 39건(1.0%), 종교단체 23건(0.6%) 순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도 순서와 같은데, 국가기관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 그 건수와 비중이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32. 상담신청인 유형

(2021. 1. 1. ~ 2023. 12. 31.)

구분 상담건수 연도	상담신청인 유형							
	개인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국가 기관	지자체 및 공공 단체	
2021	3,863 (100)	2,937 (76.0)	260 (6.7)	323 (8.4)	40 (1.0)	18 (0.5)	81 (2.1)	204 (5.3)
2022	3,329 (100)	2,532 (76.1)	194 (5.8)	338 (10.2)	32 (1.0)	20 (0.6)	52 (1.6)	161 (4.8)
2023	3,995 (100)	2,637 (66.0)	364 (9.1)	522 (13.1)	39 (1.0)	23 (0.6)	119 (3.0)	291 (7.3)

※ () 안의 숫자는 %

6

상담대상 유형

디지털 플랫폼 특성상 언론보도의 형태와 경계를 정의 내리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2022년에는 상담 대상 유형의 항목명을 일부 변경하여 원 보도에서 파생한 보도물의 형태를 더욱 정밀히 분류하였다.

그럼에도 위원회 상담대상 유형은 언론보도가 3,627건(88.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털뉴스 23건(0.6%), 언론사의 콘텐츠 중 언론보도 전채 37건(0.9%), 자체 콘텐츠 29건(0.7%)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상담대상 보도가 포털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 게재됐더라도 원 보도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3. 상담대상 유형(통계양식 변경 전)

(2021. 1. 1. ~ 2022. 10. 18.)

구분 상담건수 연도		상담대상 유형						
		원기사	매개 기사	SNS 복제 기사	유사 미디어 콘텐츠	댓글	기타	총계
2021	3,863	3,453 (75.4)	438 (9.6)	54 (1.2)	80 (1.7)	24 (0.5)	533 (11.6)	4,582 (100)
2022	2,513	2,155 (77.7)	205 (7.4)	43 (1.6)	45 (1.6)	11 (0.4)	315 (11.4)	2,774 (100)

※ () 안의 숫자는 %

표 34. 상담대상 유형(통계양식 변경 후)

(2022. 10. 19. ~ 2023. 12. 31.)

구분 상담건수 연도		상담대상 유형						
		언론 보도	포털 뉴스	언론사의 콘텐츠		댓글	기타	총계
				언론 보도 전재	자체 콘텐츠			
2022	816	649 (75.3)	13 (1.5)	26 (3.0)	54 (6.3)	2 (0.2)	118 (13.7)	862 (100)
2023	3,995	3,627 (88.8)	23 (0.6)	37 (0.9)	29 (0.7)	9 (0.2)	358 (8.8)	4,083 (100)

※ () 안의 숫자는 %

※ 상담대상은 중복 응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대상의 총계가 불일치

※ 2022년 10월 19일 부터 상담항목 변경

※ 용어설명

- 유사미디어 콘텐츠 :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에서 언론보도와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한 것
- 언론사의 콘텐츠 : 언론사가 운영하는 SNS(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전재된 언론보도 또는 자체 콘텐츠

상담신청인이 문의하는 피해구제수단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 3,148건(61.0%), 손해배상 866(16.8%) 건, 열람차단 287건(4.8%) 등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35. 피해구제수단

(2021. 1. 1. ~ 2023. 12. 31.)

구분	상담건수	피해구제수단											총계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손해 배상	열람 차단	기사 수정	기사외 정보 삭제	고소 · 고발	보도 · 배포 금지 청구	강제 집행 절차	기사/ 선거 기사 심의	기타	
2021	3,863	2,813 (48.6)	149 (2.6)	1,358 (23.5)	365 (6.3)	113 (2.0)	70 (1.2)	57 (1.0)	26 (0.4)	6 (0.1)	26 (0.4)	800 (13.8)	5,783 (100)
2022	3,329	2,264 (49.1)	89 (1.9)	914 (19.8)	308 (6.7)	157 (3.4)	34 (0.7)	89 (1.9)	28 (0.6)	8 (0.2)	19 (0.4)	699 (15.2)	4,609 (100)
2023	3,995	3,148 (61.0)	99 (1.9)	866 (16.8)	247 (4.8)	148 (2.9)	19 (0.4)	84 (1.6)	37 (0.7)	9 (0.2)	8 (0.2)	497 (9.6)	5,162 (100)

※ () 안의 숫자는 %

※ 피해구제수단 유형은 중복 응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피해구제수단의 총계가 불일치

제3절 | 평가

2023년에도 언론보도 형태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활용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는 신청인이 원 보도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유튜브 콘텐츠 게시물에 대한 언론 피해 상담을 우선 요청한 후 원 보도까지 포함해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언론보도를 좁게 정의하는 과거의 경직된 시각에서 벗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신청이 가능한 매체 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도 언론보도로 포섭해 피해구제의 효율을 높였다.

다만 언론사가 제공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언론보도 형태와 매우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를

상대로 한 신청 건들은 상담 과정에서 조정신청 대상이 아닌 이유로 별다른 조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조정 업무가 아니더라도 상담신청인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타 기관의 업무나 부수적인 해결 방안 등을 숙지하여 상담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상담신청인과 잠재적 조정신청인의 위원회 조정절차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자신청 인터페이스 개선, 편리한 신청서 작성을 위한 최신 신청 예문의 업데이트, 홈페이지 정보의 가시도 증대 등을 통해 상담 실무 업무를 개선했다. 또한 장애인 조정심리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 점자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관련 세칙을 개정하는 등 장애인 조정심리 지원 기반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그 밖에 이메일을 활용한 상담의 만족도가 전화나 방문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비대면 상담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향후 접근성이 높고 방법 또한 편리한 비대면 상담 방식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제2장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제1절 | 개요

위원회는 정부가 코로나 위기단계를 ‘경계’로 낮추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선언함에 따라 비대면 교육을 유지하면서 점차 대면 교육비율을 확대하는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했다.

특히 2023년에는 혐오·차별적 표현 예방을 위한 언론인 교육을 강화하고, 2024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을 상설화하는 한편, 연수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교육에 힘썼다.

세부적인 교육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위원회는 <상시접수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한 <언론 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176회, <연수 프로그램>으로 대상별 연수를 진행한 교육은 105회를 기록하여 총 281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언론인 대상 연수 과정으로는 <언론인 전문 연수>와 <지역 언론인 워크숍>이 개설되었다. <언론인 전문 연수>는 조정과 시정권고 제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였고 취재 업무로 대면 참석이 어려운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대면 및 비대면 혼합 교육방식으로 총 4회 실시하였다.

<지역 언론인 워크숍>은 총 3회 실시하였으며, 해당 지역 기자 등 관계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법조인 연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총 2회 실시하였다. 언론법제 및 언론관련 판결, 조정·중재제도 현황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제공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연수>는 총 4회 실시하였다. 위원회 조정·중재제도와 언론 분야 진로 관련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출장 교육, 방문 교육, 비대면·온라인 교육 방식을 병행하여 총 82회 실시하였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등 인격권 관련 소양을 높일 수 있는 내용과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미디어 활용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퀴즈쇼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신규 교육 수요처를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맞춤형 위탁연수>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공익활동 단체와 경찰청 등의 신청을 받아 기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일반인 연수>를 실시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 보도로 인해 겪는 2차 피해와 법적 구제 방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2023년에 신설한 <선거기사심의제도 연수>를 상설 운영하여 총 3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조정·중재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조정대회>를 개최해 언론중재법과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올해 강의에서 자주 활용되는 콘텐츠에 대한 PPT 템플릿을 신규 제작, 사용함으로써 가독성과 내용 전달력을 향상시켰다.

표 36. 2023년도 교육 실시현황

(2023. 1. 1. ~ 12. 31. / 단위 : 회)

구분	상시접수 교육	연수 프로그램	계
언론인	30	10	40
(예비)법조인	0	2	2
대학생	18	6	24
초·중·고 학생	0	82	82
공무원 등	125	1	126
기업 임직원	3	0	3
기타	0	4	4
계	176	105	281

제2절 | 주요 추진실적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2023년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총 176회 실시하였다. 교육 수강 대상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등 125회, 언론인 30회, 대학생 18회, 기업 임직원 3회 순이었다.

예년에 비해 언론인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육 횟수 또한 17회 증가하였다. 한편, 교육대상별 다양한 사례 발굴 및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을 통해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표 37.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2021. 1. 1. ~ 2023. 12. 31. / 단위 : 회)

대상 연도	언론인	학생	공무원 등	기업 임직원	기타	계
2021	26(1,052)	13(589)	106(5,217)	3(35)	3(100)	151(6,993)
2022	24(649)	18(443)	111(5,077)	2(68)	4(114)	159(6,351)
2023	30(873)	18(431)	125(5,850)	3(31)	0(0)	176(7,185)

* () 안의 숫자는 교육인원

2 언론인 대상 연수

가. 언론인 전문 연수

<언론인 전문 연수>는 교육 수강 기회가 부족한 군소 언론사 소속 기자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반복 교육 수강자에 대한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명예훼손 등 인격권 관련 법리 및 실제 조정사례와 혐오·차별적 표현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 및 최신 심의사례 중심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혐오·차별적 표현 예방 내용을 교육하는 등 심화과정을 운영했다.

또한 기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취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관련 언론 판례 동향과 데이터에 기반한 뉴스를 작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제공하였다.

표 38. <언론인 전문 연수> 실시 현황

(2023.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6. 9.	언론인(인터넷 매체)	16명
제2차 언론인 전문 연수	8. 31.	언론인(인터넷 매체)	14명
제3차 언론인 전문 연수	11. 2.	언론인(인터넷 매체)	14명
제4차 언론인 전문 연수	11. 13.	언론인(인터넷 매체)	7명

나. 지역 언론인 워크숍

위원회는 지역 기자 대상 워크숍을 부산(4월), 전주(7월), 제주(11월)에서 연간 3회 개최하였다.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를 구성하는 한편, 해당 지역 기자(부산일보), 연구자(전북연구원), 언론단체(제주언론인클럽) 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지역 저널리즘 제고에 도움이 되는 특강을 실시하였다.

강의 후에는 간담회를 진행하여 참석자 및 위원회 관계자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위원회 법정업무 및 교육사업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표 39.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 현황

(2023.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4. 11.	부산 지역 기자(인터넷 매체)	9명
제2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7. 6. ~ 7. 7.	광주·전남·전북 지역 기자(인터넷 매체)	14명
제3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1. 23.	제주 지역 기자(인터넷 매체)	10명

지역 언론인 워크숍



3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예비 법조인 연수에서는 다양한 내·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언론법제 및 위원회 제도에 관한 연수생들의 이해를 높였다.

연수 마지막 날 위원회 조정제도를 주제로 한 조별 토론회를 실시하여 연수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사내변호사 및 유관부서장에 의한 강평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 40.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현황

(2023.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예비법조인 연수	2. 13. ~ 2. 17.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30명
제2차 예비법조인 연수	8. 7. ~ 8. 11.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16명

예비법조인 연수



4

대학생 대상 교육

위원회는 방학기간에만 운영되었던 대학생 연수를 학기 중에도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위원회 내부강사, 언론학 교수 등에 의한 언론법제 교육에 더하여 신문·방송기자 및 PD의 언론인 진로 강연을 제공하여 위원회와 언론 분야 진로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표 41. <대학생 연수> 실시 현황

(2023.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대학생 연수	2. 22. ~ 2. 23.	전국 대학생	44명
제2차 대학생 연수	8. 21. ~ 8. 22.	전국 대학생	28명
제3차 대학생 연수	11. 10.	전국 대학생	31명
제4차 대학생 연수	12. 12. ~ 12. 13.	전국 대학생	30명

5

청소년 대상 교육

위원회는 2010년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지역 간 교육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을 개선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다. 경기사무소와 공동으로 <2023 경기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위원회 부스를 설치하여 미래 세대에게 위원회 제도를 소개하고, OX퀴즈를 통해 능동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 기회가 적은 도서 벽지 지역의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2023 경기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



청소년 언론중재스쿨(벽지 소재 학교 교육)



6 각급 기관 대상 교육

위원회는 기존에 군·경찰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수 대상을 공익활동단체, 학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지역 대학생 관련 공익활동단체와 국립서울맹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 제도 및 현직 기자 강의 등의 주제로 총 5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42. <맞춤형 위탁연수> 실시 현황

(2023.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맞춤형 위탁연수	2. 24.	공익활동단체 히어로즈 교육생	31명
제2차 맞춤형 위탁연수	5. 3.	동산고등학교 학생	50명
제3차 맞춤형 위탁연수	7. 7.	국립서울맹학교 학생	53명
제4차 맞춤형 위탁연수	8. 4.	공익활동단체 히어로즈 교육생	28명
제5차 맞춤형 위탁연수	8. 29.	사·도 경찰청 오보대응 담당 및 경찰청 홍보기획 담당자	20명

맞춤형 위탁연수



7

일반인 연수

위원회는 장애인,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혐오·차별적 표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반인 연수>는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과 차별 금지 관련 시정권고 사례를 비롯하여 범죄사건 및 다문화 관련 언론 취재와 보도 특성을 주제로 교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43. <일반인 연수> 실시 현황

(2023.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일반인 연수	5. 31.	기업 및 공공기관 홍보담당자	34명
제2차 일반인 연수	9. 15.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시설·단체 종사자 등	36명
제3차 일반인 연수	11. 7.	다문화 기관 종사자 등	16명
제4차 일반인 연수	12. 7.	범죄피해자 및 관련 기관, 단체 종사자 등	23명

일반인 연수



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을 연수프로그램으로 신설하여 상설 운영하였다.

연간 총 3회 실시한 <선거기사심의제도 연수>는 개별 언론사 대상으로 2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 지사에서 주최한 총선 보도 관련 전문연수 과정에서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여 공정한 선거 보도를 위한 관련 심의기준 및 사례를 교육하였다.

표 44. <선거기사심의제도 연수> 실시 현황

(2023. 1. 1. ~ 12. 31.)

교육신청인	일자	대상	인원
(주)경기신문사	11. 30.	기자 및 직원	20명
매일경제신문	12. 5.	수습기자	6명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	12. 7.	지역 언론인	40명

선거기사심의제도 연수



위원회는 조정·중재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조정대회>를 개최하였다. 3회째 개최된 2023년도 모의조정대회에서는 전체 10개 팀(총 42명)이 참가하였으며, 모의조정 시나리오 및 경연 수준도 향상되었다. 심사 결과, 교권 침해·직장 내 괴롭힘·마약·총선 후보자 자녀 검증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이슈를 다룬 팀들이 수상팀으로 선정되었다. 대회를 통해 위원회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한편, 분쟁조정 분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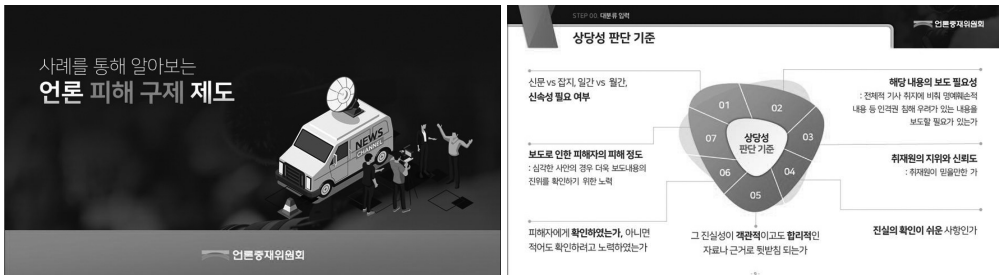
모의조정대회 시상식



위원회는 교육 PPT 양식의 통일성 및 기관 이미지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강의에서 자주 활용되는 콘텐츠에 대한 PPT 템플릿을 개발하였다.

강사가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별·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별 맞춤형 강의자료 제작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콘텐츠(PPT) 개발



제3절 | 평가

2023년 위원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차별적 표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선거 공정성 강화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을 상설화하며, 연수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통한 교육 균형성을 제고하였다. 교육사업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차별적 표현 예방 교육을 강화하였다. 혐오·차별적 표현 예방에 관한 교육내용을 언론인 등에게 필수 강좌로 교육하였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언론피해 구제교육에도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둘째, 선거 공정성 강화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을 상설화하였다. 제22대 총선에 대비하여 교육신청 창구를 별도로 신설하고, 교육대상을 언론사에서 정당, (예비)후보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전문 강사의 진행,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보다 양질의 선거기사심의제도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셋째, 연수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통한 교육 균형성을 제고하였다.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홍보 및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의 지역 균형성 확보에 노력하

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학생(국립서울맹학교) 대상 맞춤형 위탁 연수 및 도서 벽지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실시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및 언론 분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4년 위원회는 장애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상설화된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을 활성화시키며, 교육 콘텐츠를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유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업 등을 통해 장애인 보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주요 언론단체와 협의하여 회원사 등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금지 관련 시정권고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한편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보도문화 형성을 위해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을 활성화하여 언론사, 정당 관계자, 공직선거 후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선거기사심의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수강대상의 직종 및 특성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제1절 | 개요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발전을 위해 언론법제 및 인격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의제를 설정하여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정리하여 <미디어와 인격권>, <언론중재>,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등 간행물로 발간하는 한편 토론회 등 학술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3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이슈가 부각되었다. 국회에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위원회 역시 새 법 시행 전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의 범죄 보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외에도 위원회는 연 3회 발간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을 통해 미디어 윤리와 인격권, AI와 인격권, 온라인 상 극단적 표현(경계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여 변화해 가는 미디어 환경에서 인격권과 피해 구제 관련 이슈를 폭넓게 다루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연 4회 발행되는 <언론중재> 계간지에서도 OTT 플랫폼, 시정권고 제도, 디지털 미디어 관련 이슈, 언론 관련 판례 소개 등 다양한 언론법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의제에 대한 기고문을 수록하여 언론계의 각종 이슈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제2절 | 주요 추진실적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가.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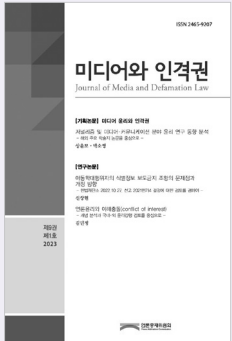
위원회는 2023년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서 미디어 윤리와 인격권, AI와 인격권, 온라인 상 극단적 표현(경계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그리고 피해구제라는 주제를 기획하여 변화해 가는 미디어 환경에서 인격권과 피해 구제 관련 이슈를 폭넓게 다루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전반적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다뤄보기에 앞서 미디어 윤리에 대한 근원적 고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3년 4월 발간된 학술지 제9권 제1호에서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윤리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언론윤리 강령 검토를 통해 언론윤리와 이해충돌의 문제를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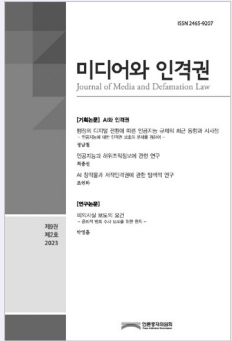
AI 기술의 폭발적 발전에 따라 2023년 미디어 분야에서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8월 발간된 학술지 제9권 제2호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격권 보호 문제를 행정의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 및 AI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였다.

12월 발간된 학술지 제9권 제3호에서는 온라인 상 극단적 표현(경계적 표현)을 기획주제로 삼아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고자 했다. 이에 정치인 대상 모욕 표현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례를 소개하는 기획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국내 법제와 미국법을 비교연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을 알권리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2023년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1호) 수록 논문

	저자	논문제목
	기획논문	
	상윤모, 박소영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 동향 분석 - 해외 주요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	
	신상현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결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김민정	언론윤리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 개념 분석과 국내 외 윤리강령 검토를 중심으로

2023년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2호) 수록 논문

	저자	논문제목
	기획논문	
	정남철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공지능 규제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인공지능에 대한 인격권 보호의 문제를 검토하여 -
	최종선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연구
	조연하	AI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구논문	
박영흠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 - 윤리적 범죄 수사 보도를 위한 원칙	

2023년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3호) 수록 논문

저자	논문제목
기획논문	
이현정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정치인에 대한 모욕표현 및 표현의 자유 한계에 관한 논의
박채림, 박아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한나, 이재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 경향과 프레임 분석 - 알권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
판례평석	
김상유	[판례평석]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 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4948 판결

이중 제9권 제1호에서 실린 김민정 교수의 논문은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선정하는 제22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며, 위원회 학술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 <미디어와 인격권>은 2020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2023년 한국연구재단의 재인증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 결과 총점 96.8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등재학술지의 지위를 향후 6년 간 유지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등재학술지 운영의 체계를 평가하는 체계평가에서는 22점 만점을 받았으며, 특히 <미디어와 인격권>이 동일 분야 학술지 중 '중심성 지수' 상위 25% 안에 드는 명성 있는 등재학술지로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학술지 운영의 질을 평가하는 내용평가에서도 총점 78점 중 74.8점의 높은 점수를 받으며, 미디어 법제 분야에서 그 우수함을 인정받는 학술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중심성지수(SJR) : 학술지 수록 논문을 인용하는 다른 학술지들의 명성도 및 종류·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 지수


나. 계간 <언론중재>

위원회는 1981년 창립 첫 해 겨울호를 시작으로 계간지 <언론중재>를 꾸준히 발간해 왔다. 2023년 <언론중재>에서는 OTT 플랫폼, 시청권고 제도, 디지털 미디어 관련 이슈 등 다양한 언론법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의제에 대한 폭넓은 고찰이 이루어졌다.

대표 지면인 [Focus on Media]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한 고찰, 언론의 자살보도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위원회 법정 업무(조정중재, 시청권고 등) 관련 이슈를 다루었다.

[사건 속 법률] 코너를 통해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범죄자 인격권 보호, '배드파더스'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사적 제재를 둘러싼 법률적 함의를 고찰하는 한편, [판례토크] 코너에서는 법원기차 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허가 관련 대법원 판결, 당사자 스스로 공개한 전과를 기사화한 언론의 손해배상책임 판결 등 언론관련 주요 판결의 쟁점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2023년도 계간 <언론중재> 봄호 (통권 166호) 내용



2023년
봄호
(통권 166호)

[Focus on Media: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의 현재와 미래]

- 인격표지영리권의 과거와 현재
(곽재우 법무법인(유한) 광장 파트너변호사), 고현진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정은주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 해외 각국의 인격표지영리권 인정 현황
(김민성 홍콩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후 연구원, 뉴욕주 변호사협회 변호사)
- 퍼블리시티권 입법의 영향(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사건 속 법률]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범죄자 인격권 보호 ①
(박경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특별기획]

시청권고 제도의 운용 성과와 전망 : 2022년 시청권고 분석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Z세대의 뉴스 이용과 미디어 리터러시(심재웅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판례토크]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일괄 비공개 원칙, 위헌일까
- 현재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

2023년도 계간 <언론중재> 여름호 (통권 167호) 내용



2023년
여름호
(통권 167호)

[Focus on Media : OTT 플랫폼과 저널리즘]

1. 방송콘텐츠 이용행태의 변화와 OTT 저널리즘
(유건식 KBS제작기획2부(언론학 박사), 前 KBS공영미디어연구소장)
2. 국내외 OTT 다국 저널리즘의 커뮤니케이션 관습과 법제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3. <나는 신이다>가 던진 저널리즘 법제의 새로운 과제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사건 속 법률]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범죄자 인격권 보호 ②
(박경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 日 NHK를 둘러싼 몇 가지 논의
(이재호 NHK대형기획부, 일본 조치대 신문학 박사)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인공지능(AI) 권리침해: 피해구제와 산업 간 균형 찾는 유럽연합(EU)
(정관영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대표변호사)

[판례토크]

법원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허가, 누가 결정하여야 할까
-서울고등법원 2021누74480, 대법원 2022두 52300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판결-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

2023년도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 (통권 168호) 내용



2023년
가을호
(통권 168호)

[Focus on Media :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 점검]

1. 조정의 원리와 비밀유지 의무(이로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2. 언론중재법상 조정 중 제소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처리(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3. 추후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고찰
(이예찬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차장,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사건 속 법률]

“네! 고소” 기사로만 말하지 않는 기자들(김도연 미디어오늘 기자)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X(트위터) vs 스레드, 단문메시지 플랫폼의 경쟁이 의미하는 것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판례토크]

당사자 스스로 공개한 전과를 기사화한 언론, 손해배상책임 부담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2842 손해배상 판결 분석-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

[특별기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언론조정, 이렇게 해볼까요?
(최승재 변호사(법학박사),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

2023년도 계간 <언론중재> 겨울호 (통권 169호) 내용



2023년
겨울호
(통권 169호)

[Focus on Media : 언론의 자살보도 이슈와 전망]

1. 국내의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동향과 특징
(위준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장)
2. 시정권고 사례를 통해 본 언론의 자살보도
(김정민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사무소장,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료)
3. 최근 자살보도 주요 이슈, 그리고 개선을 위한 제언(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건 속 법률]

'촉법나이트',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 사적 제재는 정당인가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디지털 권리장전과 표현의 자유(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미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논란과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논의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판례토크]

대북전단 살포금지규정은 왜 위헌판단을 받았을까
-헌법재판소 2020헌마 1724, 2020헌마1733(병합) 결정 분석-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

다.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위원회는 법원에서 판시한 언론 관련 판결의 핵심 법리를 법정 업무에 반영하고 대외적으로 언론법제연구와 언론분쟁해결의 주요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각급 법원의 언론관계 민사판결을 수집·분석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7월 발간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서는 2022년도에 선고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관련 민사판결 173건을 분석한 내용과 함께 주목할 만한 법리 등이 담긴 주요 판결 23건의 전문을 수록하였다.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 판결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및 승소율, 공적 인물 유형별 승소율, 손해배상 인용액, 최근 3년간 심급별 결과 분석 등 통계 분석 내용을 게재했으며, 최근 유튜브의 명예훼손 책임이 사회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제기된 7건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유튜브 판결 분석 결과, 대체로 소송 대상 원보도에 대한 판단이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법원은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하면서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똑같은 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거나 관련 유튜브 영상 하단에 정정보도 영상을 링크하도록 판



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선고된 판결 중 위원회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소제기 간주된 사건들을 별도로 통계화하고 소송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에 게재하였다.

라. <2023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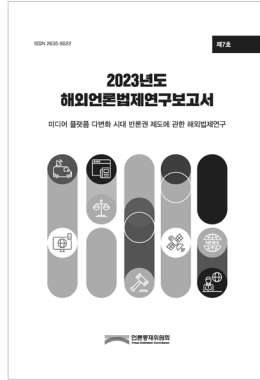
위원회는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 등에 관한 해외 현황, 관련 이론 및 판례 등을 조사하여 매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그 양상 또한 다변화되면서 반론권 제도에 대한 새로운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미디어플랫폼 다변화 시대 반론권 제도에 관한 해외법제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2023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책임연구를 맡은 강원대학교 표시영 교수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유튜브 등 미디어플랫폼이 누구나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여론형성의 장이자 정보전달의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허위조작정보, 악성댓글 등으로 대중의 의견을 유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해외 주요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의 반론권제도 동향 및 판례·사례의 흐름을 분석하고, 나아가 해외 주요국 언론사(방송사/신문사)의 자율규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반론권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거버넌스’, ‘반론권의 게재 방식’, ‘반론권 이행방식의 개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반론권의 적용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진은 각국의 반론권 제도 등을 바탕으로 향후 반론권 등 인격권 침해 사안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의 업무가 그만큼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반론과 정정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보다는 더 주목도가 높은 방식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점증하는 유튜브 내 인격권 침해 콘텐츠에 대응하는 법 조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튜브가 디지털 플랫폼 공간에서 실질적인 언론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반론권 의무가 주어질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먼저 구체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2023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7호) 개요

2023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주 제	미디어 플랫폼 다변화 시대 반론권 제도에 관한 해외법제연구
연구진	책임연구원 - 표시영(강원대학교) 공동연구원 - 이영희(배재대학교) 공동연구원 - 최경미(서울교육대학교) 보조연구원 - 진승현(한양대학교)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반론권의 연혁 및 현황 제3장 해외 주요국 반론권 동향 제4장 해외 언론사의 반론권 자율규제 현황 제5장 국내 반론권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및 논의

마.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신청 사건의 통계 분석과 주요 사례를 담은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제1부 언론조정현황’에서는 2022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사건 3,175건의 청구권별·신청인 유형별(개인직업, 단체유형)·매체 유형별·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조정사건 처리기간, 피해 구제보도문 게재위치 및 길이 등을 분석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 처리결과 관련 통계 분석을 추가하여 최근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정신청 추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에는 법리적·시사적 의미가 있는 47건(정정보도문 게재 9건, 반론보도문 게재 12건, 추후보도문 게재 4건, 손해배상금 지급 4건, (일부)열람차단 및 기사수정 9건, 기타 9건)의 주요 사례를 선정, 보도내용, 신청이유 및 조정결과를 요약 수록하였다.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관련 조정사례, 기각·각하결정 사례를 유형화해 소개하는 등 수록 사례를 다변화하여 이용자 정보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연도별 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과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를 부록으로 첨부하여 언론조정신청의 연도별 추세와 2022년 언론사별 신청현황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수록 내용

제 호	수 록 내 용	발 간 형 태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 언론조정현황 - 주요 언론조정사례 - 부록(연도별 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등)	PDF (181면)

바. <2022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시정권고 사례를 수록한 사례집을 실물책자 및 PDF 형태로 발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2022년도 시정권고 사례집>은 2022년에 처리한 1,239건의 시정권고 결정 안건 중 시의성이 있거나 대표성을 띠는 사례 30건을 선정하여 게재하였다. 또한 별도의 시정권고 전체 목록을 수록하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익 침해 유형별 대표 사례로는 개인적 법익침해 사례로 사생활 침해 등 8건, 명예훼손 1건, 피의자 신원공개 1건, 성폭력피해자 보호 위반 2건, 아동학대사건 보도 1건, 신고자 등 보호 위반 1건을 실었다. 사회적 법익 침해 사례로는 차별 금지 위반 2건, 재난보도 1건, 범죄 묘사 2건, 성관련 보도 1건, 자살 보도 3건, 마약 및 약물보도 2건, 폭력묘사 1건, 충격·혐오감 1건, 기사형 광고 1건, 기사 제목 2건을 실었다.

<2022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수록 내용

제 호	수 록 내 용	발 간 형 태
2022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 시정권고 현황 - 주요 시정권고 사례 - 시정권고 전체 목록	실물책자 40부 및 PDF본 (270면)

가. 토론회

2023년 초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국회에서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법률을 살펴보고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관련 국내외 최근 동향과 우리 언론의 범죄보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의 범죄보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중재위원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인 김광현 변호사가 ‘국내외 피의자 신상공개 현황과 입법례’를,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김창숙 박사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보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중앙대 법학연구원 김송옥 박사,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경규 박사,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법무법인 정진 장수민 변호사가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광현 조사관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피의자 신상공개 관련 법제를 소개하며 각 나라마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와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는 단순히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신중한 태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창숙 박사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인격권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언론이 반드시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경찰의 결정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신상공개를 위한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고 당위성이 부족한 선공개는 지양해야 한다고 언론의 성찰적 보도를 제안했다.

발제 후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범죄자 익명보도 원칙, 언론의 피의자 신상공개 보도 현황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박경규 박사는 피의자 신원 공개에 따른 범죄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신상공개로 얻을 수 있는 불확실한 효과보다는 범죄의 대물림 현상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는 언론이 경찰의 결정에 앞서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할 때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제적 신상공개에 따른 보도효과를 분석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기존 익명보도 원칙에서 실명보도 원칙으로 범죄보도의 경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김송옥 박사는 미국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명보도에 순기능이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의 ‘익명보도 원칙 및 예외적 실명보도’를 ‘실

명보도 원칙 및 예외적 익명보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전 동아일보 법무팀장을 역임한 장수민 변호사도 신상공개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는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포함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 상규정으로 인하여 신상공개가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3년도 토론회



2023년도 토론회 개최현황

일 자	2023. 11. 15.
장 소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구 외신기자클럽)
주 제	<p>대주제 :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의 범죄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주제 :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국내외 현황과 입법례 • 제2주제 :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보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p>사회자,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 문재완(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발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주제 : 김광현(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변호사) • 제2주제 : 김창숙(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강사, 언론학 박사) - 지정토론자(가나다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승옥(중앙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박경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윤수현(미디어오늘 기자) • 장수민(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전 동아일보·채널A 법무팀장)

나. 중재위원 연수

위원회는 2023년 5월 12일~13일 이틀간 경기 양평군에서 전국 18개 중재부 중재위원을 대상으로 한 중재위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추후보도청구권 관련 최근 쟁점과 유튜브 등 온라인 뉴스플랫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안에 관한 실무적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외부 강사 초청강의를 실시했다.

서정찬 변호사(서울제7중재부 중재위원)가 ‘추후보도청구권 관련 최근 쟁점 연구’를 주제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추후보도청구권 성립요건 및 행사기간에 관한 실무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형사절차 이외의 행정처분에 대한 추후보도 청구요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정배 조사팀장은 ‘유튜브 등 온라인 뉴스플랫폼으로 인한 피해구제 현황’이라는 주제로 2022년 위원회가 구성, 운영한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설명하고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동영상 콘텐츠 관련 최신 조정사례와 유튜브 보도 관련 피해구제 방안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조강혜 컨설턴트(Human Innovation Management 대표)가 ‘공감을 통한 조정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의를 진행, 중재위원이 언론분쟁조정 절차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이해하고 상황별 커뮤니케이션 요령과 현업 사례 등을 깊이 있게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재위원 연수를 이용해 조정 관련 각종 법리, 언론피해구제 실무 개선방향 등에 대한 중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위원의 조정중재실무 적응 및 전문성 강화, 원활한 심리 진행을 위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도움의 장으로 개최·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도 중재위원 연수 개최 현

일 자	2023. 5. 12.(금) ~ 5. 13.(토)
장 소	블룸비스타 (경기도 양평군)
사 회	김윤정 (운영본부장)
주 제	<p>[주제] 추후보도청구권 관련 최근 쟁점 연구 • 발제 : 서정찬 (서울제7중재부 중재위원)</p> <p>[현황보고] 유튜브 등 온라인 뉴스플랫폼으로 인한 피해구제 현황 • 발제 : 손정배 (조정본부 조사팀장)</p> <p>[외부특강] 공감을 통한 조정 커뮤니케이션 스킬 • 발제 : 조강혜 (Human Innovation Management 대표 컨설턴트)</p>
참석인원	중재위원, 사무처 직원 등 50명 참석

중재위원 연수



3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실시

위원회는 2회에 걸친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사업을 통해 사무처 직원을 N3 미디어 컨퍼런스(N3 Media Conference)에 파견하고,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유관기관을 시찰하도록 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도 방식과 분쟁해결 제도 운용방식, 언론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사업 참가자들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개최된 N3 미디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시가 전 세계 언론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언론사들 및 언론 산업 관계자가 챗GPT 등 AI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조사하고 아시아 전역의 전문가들과 교류를 넓혔다. 또한 싱가포르 내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싱가포르 조정센터(Singapore mediation Centre)를 방문하여 각 기관의 조정제도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조정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용 방식을 검토했다.

한편, 2차 사업 참가자들은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언론인연합(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Malaysia) 등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언론조정중재 제도를 소개했다.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제3절 | 평가

위원회의 조사·연구 활동은 국내외 언론법제와 주요 판결에 대한 연구, 유관기관의 제도 및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언론과 시민의 권리가 함께 보호받는 사회가 되는 과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위원회는 언론중재법과 공직선거법 등 기존 법정 업무 외에도 언론과 언론법제 영역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이슈나 의제를 발굴하여 토론회 및 연구 간행물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개진하는 장을 마련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후 4년 간 논문 심사·편집시스템을 유지, 강화시켜 온 결과 한국연구재단의 재인증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향후 6년 간 등재학술지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향후에도 ‘중심성 지수’ 등 각종 지표에서 상위 그룹을 유지하며 미디어 법제 분야의 선두 학술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언론분야 판례 동향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참고자료로 자리 잡은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도 매년 발간하고 있다. 금년에는 유튜브 채널의 명예훼손 책임을 다룬 판결을 따로 분석하는 등 통계 분석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보고서 발간 직후 비대면 화상회의 형식으로 발간 보고회를 가져 위원회 내 직원들의 보고서 및 언론 판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내 연구 외에도 위원회는 반론권 제도에 관한 해외 법제 연구를 주제로 정해 <2023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해외의 반론권 관련 입법례와 주요 운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위원회는 국내외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언론 법제 관련 연구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국내외에 소개하고 위원회 법정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제1절 | 개요

위원회는 매년 언론조정·중재제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위원회 업무 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위원회 장·단기 정책 목표 및 비전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3년 이용만족도조사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리서치랩을 통해 진행되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정신청사건 심리에 참석한 신청인/피신청인 343명(신청인 193명, 피신청인 150명), 상담이용자 462명, 교육수강자 701명 등 총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에 따라 온라인(웹) 조사, 전화 면접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대상별 평가항목은 신청인/피신청인 공통으로 ▲심리 전 절차 안내, ▲중재부의 심리 진행, ▲심리 후 절차 안내 등으로 구성해 차원별 세부 항목의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각 차원별 중요도를 반영한 종합만족도 역시 살펴보았다. 또한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시정권고 제도 인지도, ▲시정권고 제도 효과, ▲시정권고 미이행 언론사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접수 단계를 거치는 신청인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인 대상으로 ▲상담창구 만족도, ▲조정 신청과정 만족도를 별도 조사하였다. 또한 인터넷상의 언론피해 구제방안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상 보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뉴스 형태의 유튜브 콘텐츠 유형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식을 조사, 향후 피해구제제도의 개선 과제 등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삼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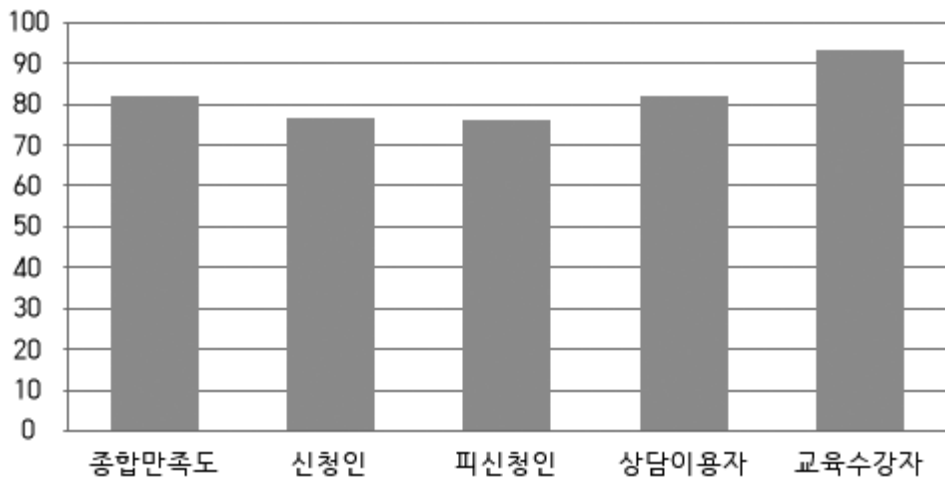
한편 위원회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이용의 편리성, ▲상담원 친절성, ▲상담원 경청자세, ▲상담내용 신뢰성, ▲문제해결 도움도, ▲전반적 만족도 등 총 6개 항목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상담 후 조정신청 여부 및 위원회 이미지, 인지도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위원회의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주제 및 내용, ▲제도에 대한 이해, ▲사건/

사례를 이용한 설명, ▲교육자료 충실성, ▲강사의 성의 및 태도, ▲전반적 만족도 등 총 6가지 항목에 대한 종합만족도를 측정하였다.

2023년도 전체 종합만족도 및 조사대상별 만족도

단위: 점

종합만족도	신청인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
81.9	76.6	75.8	81.8	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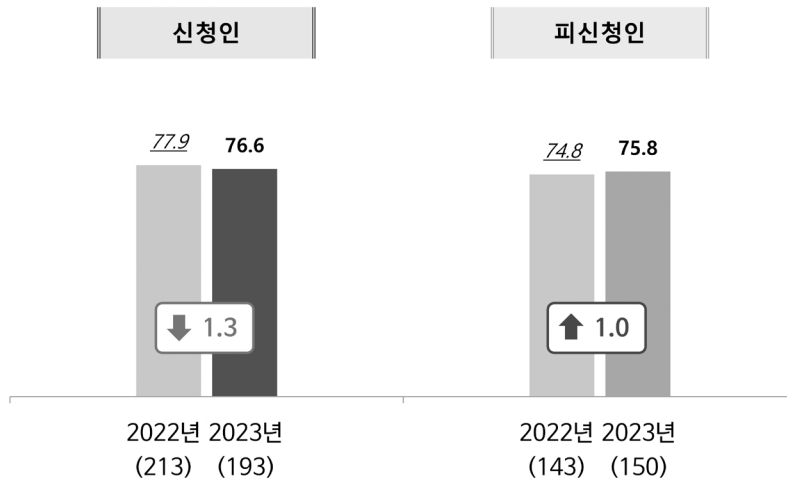
제2절 | 주요 조사결과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2023년도 신청인 종합만족도는 76.6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하락하였고,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75.8점으로 전년 대비 1.0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피신청인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상담창구’(85.3점) > ‘심리 전 절차 안내’(82.4점) > ‘심리 후 절차 안내’(77.1점) > ‘조정 신청과정’(74.8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70.4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심리 전 절차 안내’(81.9점) > ‘심리 후 절차 안내’(78.4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68.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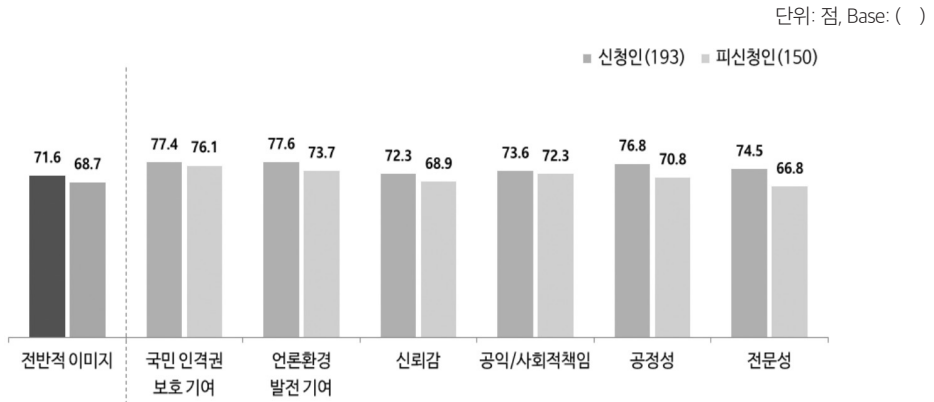
신청인의 ‘상담창구’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87.1점→85.3점), 신청인과 피신청인 공통으로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나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나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 방법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경우 ‘기사삭제’(85.6점) > ‘사과’(79.5점) > ‘정정·반론·추후보도 등’(72.9점) > ‘손해배상’(51.4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정정·반론·추후보도 등’(67.9점) > ‘기사삭제’(61.3점) > ‘사과’(60.4점) > ‘손해배상’(48.4점)의 순으로 나타나 신청

인, 피신청인의 만족도 모두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전반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신청인의 경우 71.6점으로 전년 대비 2.0점 하락했고, 피신청인의 경우 68.7점으로 1.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이미지 평가 세부항목 중 신청인은 ‘언론 환경 발전 기여’, ‘국민 인격권 보호 기여’, ‘공정성’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고, 피신청인은 ‘국민의 인격권 보호 기여’, ‘언론환경 발전 기여’, ‘공익/사회적 책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청인의 위원회 이미지 평가는 대부분 항목에서 소폭 하락했으나, 피신청인은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인지도 조사에서는 87.6%가 조정신청 이전에도 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1.2%p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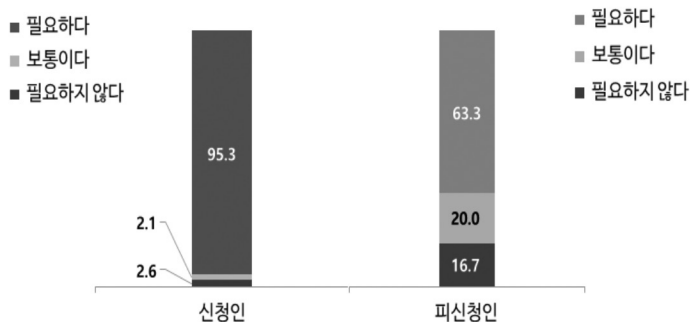
한편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신청인의 57.5%, 피신청인의 70.7%가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제도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신청인의 경우 68.4%, 피신청인의 경우 69.3%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다수가 긍정적 효과를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정권고 결정 후에도 동일 법익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에 대한 강화된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90.7%, 피신청인의 62.7%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인터넷상의 언론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안 및 뉴스 표방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 조사도 실시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 경로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SNS플랫폼, 방송, 인터넷신문, 신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유튜브나 일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신청인의 91.7%, 피신청인의 경우 82.0%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대다수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정/열람차단(삭제) 청구권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상당수(신청인 95.3%, 피신청인 63.3%)가 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신청인의 긍정 응답이 피신청인에 비해 30% 이상 높게 나타나 인터넷 기사로 인한 언론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기사 수정/열람차단(삭제) 청구권 도입 필요성

단위: %, Ba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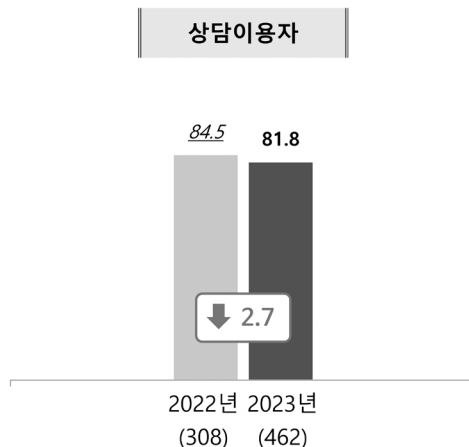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는 81.8점으로,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담원 친절성'이 85.0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담원 경청자세'(84.7점), '상담내용 신뢰성'(82.6점), '문제해결 도움도'(79.1점), '상담 이용 편리성'(77.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대부분 항목에서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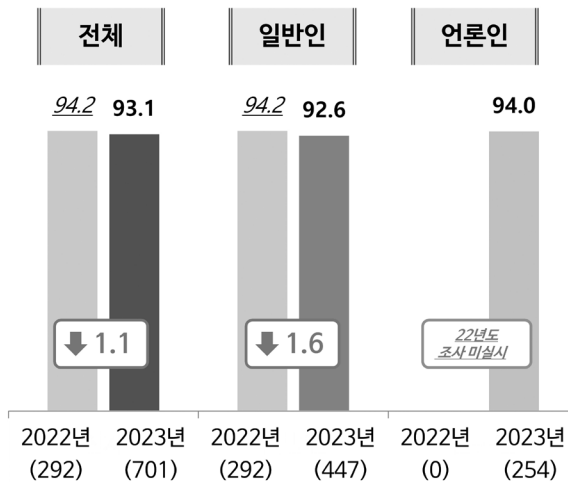
상담 후 조정신청 여부 및 미신청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이용자의 46.3%가 상담 후 조정을 신청했다고 응답했으며, 상담 후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가 번거롭거나 어렵게 느껴져서’(33.9%), ‘신청매체가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16.1%), ‘상담 내용이 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에 해당돼서’(7.3%), ‘신청 가능한 기한이 지나서’(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위원회의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수강자의 종합만족도는 93.1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수강자의 만족도는 92.6점, 언론인 수강자의 만족도는 94.0점으로서 언론인 수강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항목별 만족도는 ‘강사의 성의 및 태도’(95점), ‘교육자료의 충실성’(93.5점),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93.3점), ‘주제 및 내용’(92.7점), ‘제도에 대한 이해’(91.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단위: 점, %, Base: ()



※ 2022년의 경우 교육 수강자 중 언론인에 대한 표본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함

제3절 | 평가

2023년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조정절차를 이용한 신청인의 만족도는 2022년 대비 1.3점 하락한 반면,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1.0점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중재부의 심리 진행' 차원이 중점개선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신청인의 경우 전년 대비 2.8점이 하락한 반면 피신청인의 경우 1.3점 상승했다. 중재부가 적절한 피해구제를 위해 양측 입장을 조율하고 적극 심리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요도가 가장 높은 차원인 점을 감안하면 당사자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된다.

상담이용자의 경우에는 종합만족도가 전년 대비 2.7점 하락한 81.8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 중 '문제해결 도움도' 및 '상담이용 편리성' 항목이 중요도는 높은 반면 만족도는 낮은 축에 들어 중점 개선 영역으로 분류되는 등, 상담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도 전년에 이어 인터넷상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및 필요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가장 영향력이 큰 뉴스 소비 경로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포털'을 선택했으며, 지면 매체인 '신문'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사가 아닌 개인 유튜버 등이 운영하는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관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에 대해 신청인의 91.7%, 피신청인의 82.0%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피해구제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정/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다수(신청인의 95.3%, 피신청인의 63.3%, 상담이용자의 90.3%)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원 보도가 그대로 인터넷에 노출되어 지속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피해의 지속성에 따른 실효적 구제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올 한해 2023년도 이용만족도 조사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다소 미흡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제5장 홍보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제1절 | 개요

2023년 위원회는 유튜브, 공감블로그 등의 온라인 홍보채널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각 온라인 홍보채널별 특성을 반영한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해당 콘텐츠의 다각적·유기적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홍보채널별로 분산되어 있던 콘텐츠 제작·관리를 하나의 위탁업체로 일원화하면서 면밀한 기획을 통해 산출되는 콘텐츠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품질을 제고하였다. 또한 온라인 홍보채널의 특성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접근도, 활용도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각 콘텐츠를 다양한 온라인 홍보채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변형, 게시하여 각 홍보채널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다양한 온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위원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용자 직접 참여형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위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연계 ‘커피차 이벤트’를 진행했고, 운용 중인 온라인 홍보채널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였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 위원회 대표 캐릭터인 ‘어니’를 응모, 본선까지 진출하여 축제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학생 영상기자단’을 조직, 운영하여 대학생만의 참신하고 다채로운 관점으로 제작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소개 영상을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여 이용자들의 많은 호응을 유도하였다.

2023년이 토끼의 해(계묘년)라는 점에 착안, 토끼를 형상화 한 위원회 대표 캐릭터 ‘어니’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어니’를 대표로 하는 인스타그램 계정(@ernie_sta_gram)을 개설하여 소소하고 친근한 일상을 공유하면서 이용자와 소통하는 한편, ‘어니’ 굿즈 5종

세트를 제작하여 대국민 활동(각종 교육, 대면 홍보, 이벤트 등) 시 배포하는 등 보다 친근하고 편안한 대외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대형 전광판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광고 활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LCD 디지털 포스터 광고'라는 새로운 광고 영역을 발굴, 위원회 대표 캐릭터 '어니'를 활용해 제작한 디지털 포스터 광고 3종을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역 인근에 설치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아울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성과, 활동 등이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위원회는 또한 국제협력과 국내 지역 홍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언론사 및 언론피해구제기관을 방문해 언론분쟁 해결을 위한 해당 국가의 절차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언론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호주 시드니에서 '저널리즘의 과제 - 사회, 규제, 갈등과 위기'를 주제로 개최된 '2023년 JERAA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디어 이슈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호주 언론평의회를 방문하여 호주 언론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위원회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더불어 위원회는 지역 언론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언론 현황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언론분쟁 해결 절차 및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지역 소재 대학언론사 소속 학생기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소개와 홍보,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중재제도 교육을 목적으로 한 '기자 간담회 및 교육 연수'를 새롭게 기획, 실시하여 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언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대상 홍보 및 협력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제2절 | 주요 추진실적

1 온라인 홍보활동 및 오프라인 광고 집행

가.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위원회는 그동안 홍보채널별로 분산 관리, 운영하던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통합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홍보채널 운용·관리를 통한 효율적 홍보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 아울러 각 홍보채널별 성격과 트렌드, 이용자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홍보채널의 특징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작, 채널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콘텐츠가 하나의

홍보채널에서만 활용,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홍보채널을 통해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콘텐츠 형식 변형을 통해 연계성 강화 및 유기적 운용에도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공감블로그의 콘텐츠 제작·관리를 하나의 위탁업체로 일원화하고 면밀한 기획과 정기적인 콘텐츠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산출되는 콘텐츠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각 홍보채널 실무자들 간 채널 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홍보채널 간 콘텐츠 상호 활용과 공유 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대표적 대국민 홍보채널인 공감블로그(blog.naver.com/pac3083)의 경우,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언론법제 및 미디어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블로그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 미디어 소식 전반과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심도 있게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용하였다. 매주 1회 국내·외 미디어 소식을 요약해 소개하는 <팩픽토픽> 코너를 신설해 다양한 미디어 관련 소식을 이용자들에게 전달하였고, 특히 위원회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및 계간 <언론중재> 등을 비롯한 위원회 대표 발간물 수록 내용과 학술 토론회 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전문적·학술적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위원회의 연구 성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다양한 교육 실시 현장(서울맹학교 시각장애인 대상 교육, 장애인 유관단체 교육, 언론사 대상 선거기사심의교육 등)을 직접 취재해 콘텐츠화하였으며, 위원회 조정중재, 시정권고심의, 선거기사심의 등의 법정업무 관련 통계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제공하는 등 위원회 사업성과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AI 저작권’,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등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적극 발굴하여 유익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위원회 블로그로 검색 유입을 도모하였다. 이밖에도 위원회 유튜브 콘텐츠 역시 공감블로그 형식에 맞게 변형해 수시로 소개하여 공감블로그 이용자들이 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이동해 각종 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용자들의 위원회 공감블로그 체류시간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시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위원회 블로그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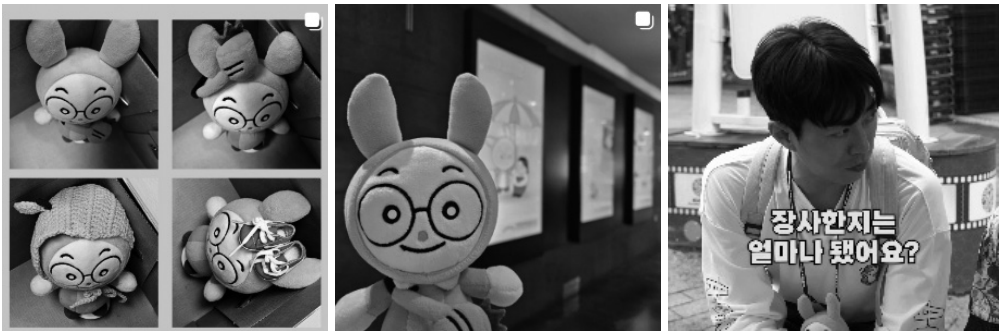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한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pacpr)은 2023년에도 주 홍보 대상인 20·30 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구성과 흥미·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작, 전달해 이용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 따라 부르기 쉽고 중독성 있는 CM송, ▲ 실제 언론조정 사례를 각색해 유머러스하게 담은 웹 드라마, ▲ 유명 MC가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위원회를 홍보한 길거리 예능 <배낭 메고 퀴즈쇼>,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변호사가 함께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연자의 고민을 공감하며 상담하고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당신을 위한 공감과 치유 왔어요> 등 기존 콘텐츠와는 차별화되는 트렌디한 시리즈를 다수 기획해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쇼츠 / 숏폼)에 대한 20·30 세대의 선호를 적극 반영하여 기획 쇼츠 등 다양한 숏폼 영상을 제작·게시해 수 천 회의 조회 수를 달성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밖에도 참신한 시각으로 위원회를 알리고 위원회에 대한 20·30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대학(원)생 영상기자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공모를 거쳐 치열한 경쟁 끝에 선발된 '대학(원)생 영상기자단' 5팀은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간 활동하며 정규 영상 콘텐츠 10편과 쇼츠 18편을 직접 연출·제작해 공개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채용설명회를 열어 위원회 인재상 등을 소개하는 등 위원회 적극 관심층(채용지원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잠재적 위원회 관심층(채용지원자 또는 일반 이용자 등)이 부담 없이 위원회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3년 위원회 유튜브는 총 83편(정규 콘텐츠 35편 / 쇼츠 48편)의 콘텐츠를 생산, 공개하였으며 구독자수 및 조회 수가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대하였고, 만 18세 ~ 만 44세 시청자 비율(전체 시청자의 73.4%)을 크게 늘리는 등 유의미한 운영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 유튜브 채널 콘텐츠



한편, 위원회는 위원회라는 이름이 가진 다소 딱딱한 이미지를 해소하고 보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20·30 세대와 소통하고자 위원회 대표 캐릭터 ‘어니’를 주인공으로 한 인스타그램 채널(instagram.com/ernie_sta_gram)을 새롭게 개설, 운영하였다.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는 위원회의 각종 정책 업무 정보와 같은 정보성 콘텐츠는 지양하고, ‘어니’가 직접 위원회 사무처 근처 맛집을 소개하거나 일상 공감 콘텐츠를 전달하는 식의 친숙하고 일상적인 소식을 공유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단시간 내에 상당한 수의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히 위원회 유튜브 채널의 쇼츠를 유기적으로 연계, 재가공한 콘텐츠(릴스)를 게시하여 5천 회에서 2만 여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이용자들로부터 상당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위원회 인스타그램 콘텐츠



이 밖에도 위원회는 웹진 <언론  사람> 및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행(웹진 <언론  사람>은 월 1회, 뉴스레터는 월 2회)하여 위원회의 주요 활동 또는 미디어 이슈에 대한 소개와 심층 분석을 담은 ‘PAC이슈톡톡’, ‘Newsmedia of the world’ 코너와 생생한 분쟁현장 취재기 ‘새가슴 PD의 분쟁현장르포’, 갈등조정에 관한 통찰을 담은 ‘시선(視線)’ 등의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풍부한 정보와 알찬 교양이 담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또한 보도자료 전문을 게시하고 여타 홍보채널의 콘텐츠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위원회 페이스북을 활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위원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온라인 홍보채널에 접근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나. 오프라인 광고 집행

위원회는 2023년에도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였다. 상반기에는 1·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신문사 대형 옥외 뉴스 전광판(서울시 중구 소재)에 20초 분량의 캠페인 광고를 집행하였다. 하반기에는 지하철 및 KTX 등의 교통수단 승하차 인원이 많고 각종 편의시설로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과 연결된 AK 플라자 수원점(수원구 팔달구 소재) 내 전광판에 20초 캠페인 영상 광고를 집행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 캠페인 영상 광고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형식의 'LCD 디지털 포스터 광고' 3종을 제작·집행해 최대한의 광고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포스터는 위원회 대표 캐릭터 '어니'를 활용하고 눈에 띄는 배경색을 적용해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새롭게 제작한 'LCD 디지털 포스터 광고'는 하반기 유동인구가 상당한 서울 신촌 유플렉스 건물(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신촌역으로 연결되는 통로 벽면을 따라 설치된 LCD 광고판 21기에 1일 100회 이상 반복적으로 표출되도록 하여 기관명 및 CI 등을 각인시킴으로써 위원회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각종 광고 집행



▲ 디지털 포스터 광고 3종

▲ AK 플라자 수원점 전광판 광고

2 대국민 직접 소통 강화 홍보활동 전개

가. 창립 42주년 기념 온·오프라인 연계 이벤트 실시

위원회는 대국민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일환으로 위원회는 창립 42주년을 기념하여 온·오프라인 연계 '커피차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위원회 서울사무처가 위치한 프레스센터 건물 앞 광장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대표 캐릭터 '어니'를 활용해 제작한 홍보물품(굿즈)와 커피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제공하며 위원회 유튜브 채널 구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이와 동시에 2023년 새롭게 개설한 위원회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 홍보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및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추억의 뽕기 / 커피차 이벤트 현장 사진 SNS 공유 이벤트 등)도 진행하였다.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 온·오프라인 연계 '커피차 이벤트'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위원회 홍보채널로의 신규 이용자 유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창립 42주년 기념 온·오프라인 연계 커피차 이벤트 현장사진



나.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참여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 위원회 대표 캐릭터 '어니'를 출품하여, 총 137개 출품작 중 30개를 선정하는 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개최된 '우리동네 캐릭터 축제(10.14~10.15.)' 행사에도 참여해 야외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축제 현장에서는 위원회 홍보부스 방문자를 대상으로 '롤렛 돌리기' 이벤트를 통한 '어니' 굿즈 제공을 비롯해 홍보 팸플릿과 교육 안내 책자 등을 배포하였다. 양일 간 진행된 축제 기간 동안 약 1,000여 명이 위원회 부스를 방문해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고 위원회 온라인 홍보채널을 구독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큰 호응과 관심을 나타냈다.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축제 현장



3

위원회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위원회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토끼를 형상화 한 위원회 대표 캐릭터 ‘어니’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어니’를 메인 소재로 한 다양한 홍보물품(굿즈) 5종 세트 및 다이어리·달력 세트 등을 제작하여 대외 홍보활동(각종 이벤트, 우리동네 캐릭터 축제 등) 및 교육활동 시 배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어니 굿즈 5종 세트 / 다이어리·달력



4

국제협력 사업

가.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위원회는 2023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언론사 및 언론피해구제기관을 방문해 우리나라와 방문국의 언론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에 대한 정보와 언론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우리나라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였다.

위원회 대표단은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한 신문사 ‘데어 슈탄다드(Der Standard)’를 방문해 독자들이 제기한 불만을 처리하는 절차와 오보 발생에 따른 피해구제 조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를 방문해 위원회와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의 사건 처리 규모와 결정 효력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위원회 대표단은 독일의 신문사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을 방문해 독자 불만처리 현황과 독일 법제의 특성에 따른 언론분쟁해결방식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독일 언론평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각 기관의 사건 처리 현황 및 유튜브 등을 조정대상 관할 범위에 포섭하는 문제와 잊혀질 권리, 가짜뉴스 등 최근 언론계 이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위원회는 방문국 각 기관들과의 대담을 통해 위원회의 언론조정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언론불만 및 언론분쟁 관련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언론사 및 언론평의회 관계자들은 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결과의 법적 구속력 보유, 평균 20일 이내의 단기간 내 언론분쟁해결, 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한 언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부의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해 큰 관심과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위원회 제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위원회 대표단과 방문국 각 기관 관계자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면서 각국의 언론 현황 및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현황

일정	2023. 6. 11. ~ 6. 18.
방문지	오스트리아, 독일
방문기관	· 데어 슈탄다드(Der Standard) ·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 독일 언론평의회
대표단	· 이석형 위원장 · 남승균 부산사무소장 · 원용성 총무팀 과장

오스트리아 언론 유관기관 방문



▲ 신문사 데어 슈탄다드 방문



▲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방문

독일 언론 유관기관 방문



▲ 신문사 타게스슈피겔 방문



▲ 독일 언론평의회 방문

나. 해외학술연구 협력

위원회는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2023년 JERAA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호주저널리즘교육연구협회(Journalism Education & Research Association of Australia)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저널리즘의 과제 - 사회, 규제, 갈등과 위기'를 주제로 AI 저널리즘, 전쟁보도, 미디어 다양성, 젠더 저널리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세계적인 언론 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3년 JERAA 컨퍼런스'에 참석한 위원회 대표단은 이어 호주언론평의회를 방문, 사무국장 및 불만처리 이사 등과 만나 양국의 언론피해구제 제도와 언론분쟁 처리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대담에서 호주언론평의회 관계자들은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제도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 및 학술활동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위원회는 2001년 첫 방문을 시작으로 호주언론평의회와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해외학술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호주 시드니대학교 광기성 언론학 교수와의 면담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대표단과 광기성 교수는 한국과 호주의 언론 현황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제, 위원회 언론분쟁사건 처리 현황, 세계적으로 논의가 뜨거운 여러 미디어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였다.

해외학술연구 협력 현황

일정	2023. 12. 4. ~ 12. 8.
장소	호주 시드니
학술연구 협력 활동	‘2023 JERAA 컨퍼런스’ 참석, 호주언론평의회 방문, 시드니대학교 객기성 언론학 교수 면담 등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세 부위원장(서울제4중재부) · 서정찬 중재위원(서울제7중재부) · 김광석 중재위원(서울제8중재부) · 조준원 사무총장 · 이홍길 교육팀장

해외학술연구 협력



▲ 2023 JERAA 컨퍼런스 참석



▲ 호주 언론평의회 방문

5

지역 홍보활동 전개

가. 지역 언론사 대표 간담회

위원회는 이석형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경인지역, 광주지역, 강원지역 언론사 대표들을 초청, 각 지역의 주요 언론 현황과 언론 현안에 대한 언론계 입장 등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석형 위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종국적으로 조화롭게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 언론조정중재제도에 언론사 역시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 방안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해 언론사 대표들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 지역 대학언론 기자 간담회 및 교육 연수

위원회는 각 지역사무소 및 교육 부서와의 협업 하에 지역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2회에 걸쳐 대전·충청권역 및 부산지역 대학언론사 소속 학생기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소개와 홍보,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중재제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대학언론 기자 간담회 및 교육 연수’를 실시하였다. 2023년 새롭게 기획된 이번 간담회 및 연수에서는 해당 지역 대학언론 기자들의 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언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전·충청권역 대학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자 간담회 및 교육 연수에는 <공사신문>, <카이스트방송국> 소속 대학생기자 16명이 참여했으며, 위원회 부산사무소 내 교육장에서 개최한 부산지역 대학언론 기자 간담회 및 교육 연수에는 <한국해양대방송국> 등 7개 대학언론 소속 기자 21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지역 대학언론 기자 간담회 및 교육 연수



▲ 대전·충청권역



▲ 부산지역

제3절 | 평가

2023년 한 해 위원회는 새로운 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먼저 위원회는 각 온라인 홍보채널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생산 및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위원회 관련 콘텐츠 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온라인 홍보채널 운용 및 관리의 통합화를 통해 산출되는 콘텐츠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콘텐츠를 개별 온라인 홍보채널 특성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변주하여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콘텐츠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성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각 온라인 홍보채널의 조회 수, 구독자 수, 팔로워 수 및 체류시간 등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위원회는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주춤했던 대면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새로운 시도에도 나섰다. 창립 42주년을 기념하여 위원회 역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 연계 ‘커피차 이벤트’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참여를 유도해냈으며, 단순 간담회 방식의 지역 홍보행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대학언론 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지역 홍보의 방식을 새롭게 발굴하였다. 위원회 대표 캐릭터인 ‘어니’를 홍보활동 전면에 세워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참여 등)하고 굿즈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전광판 중심의 광고 활동을 넘어 ‘LCD 디지털 포스터’를 활용한 광고를 시도하는 한편, 내실 있는 국제협력 사업 진행을 통해 위원회의 활동과 그 동안의 성과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2023년 위원회의 홍보활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국내와 국외를 넘나들며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시도를 바탕으로 대국민 위원회 인지도 제고 및 밝고 친근한 위원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4년 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각 홍보채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채널별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개별 홍보채널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 대면 홍보활동 기조를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을 넘어 전국 각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광고·홍보 활동을 확대 실시하여, 위원회 관련 정보의 상대적 부족으로 정당한 권리구제 행사에 다소간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제6장

기타 주요활동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1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위원회는 조정심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중재부 조정 심리실 한 개를 증설하였다. 이에 따라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심리 지연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중재부 증설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조정심리에 참석하는 신청인, 피신청인, 중재위원 등 당사자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였다. 첫째로, 중재위원 회의실을 심리실 및 당사자 대기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이전하여 중재위원과 당사자들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심리결과 등과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심리가 안정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둘째로, 심리 전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사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양 측이 대기할 수 있도록 대기 공간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함으로써, 각 중재부의 조정심리가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실 구조를 개선하여 내방 민원인과 상담직원의 동선을 분리하였고, 지역사무소에는 안면인식 출입단말기와 인터폰을 추가 설치하는 등 민원사무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실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욕설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각 민원사무 담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를 지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심리실,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 개편 과정에서 신체장애를 지닌 이용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관련 지원 비용을 구비했다. 또한, 사무처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추가확보를 위한 구조개선 공사를 병행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최적의 사무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임직원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무환경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중재부 조

정심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지역사무소가 상담·교육 및 지역 내 대외업무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사무처 시설개선



2 전산 시스템 안정성 확보

위원회는 근태관리시스템 도입, 조정중재시스템 고도화, ERP 시스템 등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 추가 등으로 중재부 및 사무처 업무 전반이 전산화됨에 따라, 전산사무의 체계성 및 내실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위원회 업무시스템이 클라우드 센터의 가상서버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클라우드 센터의 자연재해 혹은 비상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적인 보호조치가 불가능하여 법정업무에 필수적인 데이터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의 방지를 위한 백업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그룹웨어·ERP(G20)·이메일·조정중재시스템·기사심의시스템·QR인증·PDF변환·전자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업무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별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서울사무처 서버실 내에 물리적으로 구분된 백업장치를 구축하여, 전산 데이터베이스 소실로 인한 위원회 법정사무의 마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위원회 업무 특성상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가 업무용 PC에 보관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전자문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정보 유출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안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PC 내 저장된 문서 중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하고, 해당 파일이 이메일·USB저장 등의 방법을 통해 외부로 반출될 경우 복호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프린터로 출력된 모든 문서 하단에 출력일시와 출력자의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 문서 바탕에 위원회 로고가 워터마크로 삽입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무처 임직원의 인식을 개선을 도모했다.

향후 위원회는 개인정보보안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무처 임직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웹한글기안기, 최신 한글 프로그램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을 확보하여 위원회 전산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2023 ANNUAL REPORT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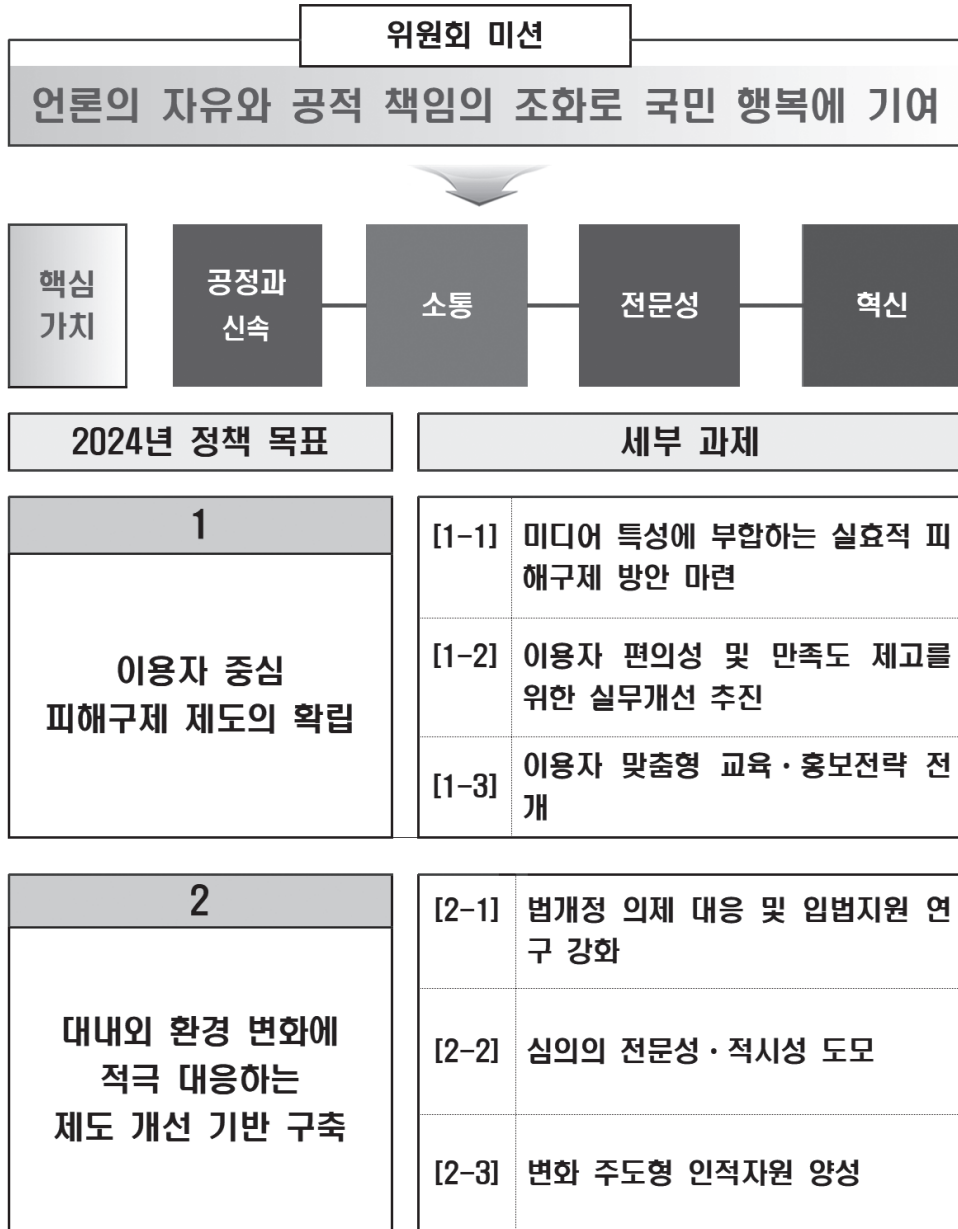
PART

4

2024년도 업무계획

- 2024년도 위원회 대내외 환경요인
- 2024년도 위원회 핵심 과제
- 세부 추진과제

- 제22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인 만큼, 중재위원 증원 및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 등 시급한 현안을 선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신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상임위 및 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전방위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 2023년도 조정사건 처리건수가 전년도 대비 약 28.7%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거나(2022년 3,175건 → 2023년 4,085건), 반면 사건처리가 지연(2023년도 평균 사건처리일수 21.5일)되는 등 법정 처리기한의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처리기간의 단축 등을 포함, 이용자의 실질적 만족도 제고를 위한 근거법 개정 및 실무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점검과 이에 따른 세부 실행 대책 마련 시급
- 2024년도 상반기 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선거보도 환경을 마련하고, 심의 제도 및 실무적 개선 방향 논의 지속 필요
- 2024년 하반기 중 임기만료에 따른 중재위원 위촉이 대거 예정되어 있는 바(2024. 8. 31.자 49명 위촉 예정), 신속한 적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3

세부 추진과제

1-1 미디어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 [조정 관련 각종 법리 적극 검토] 이용자 관점에서의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이슈 발굴→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한 법리 검토 및 실무 개선 방안 제안→ 전 중재부 공유→ 적극 도입 및 실시에 이르는 환류시스템 구축
※ '22년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23년 <추후보도청구 요건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가 각 구성, 운영된 바 있음
- [뉴미디어 관련 피해구제 실무기준 지속 연구]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 관련 조정현황 지속 업데이트 및 공유, ▲관련 조정사례 축적에 따라 피해구제 합의문안 표준안 지속 점검 후 개선

1-2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무 개선 추진

- [상담채널의 다변화 도모] 유선 등 직접적 대면 방식을 불편해하는 연령층의 이용 편의를 위해 텍스트 기반 상담 방식 도입 가능성 및 위원회 홈페이지 상담코너 메뉴 개선 방안 등 적극 검토 후 실행방안 마련
- [조정당사자를 위한 절차안내 강화] ▲심리 진행 전반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안내영상 등 이용 편의성이 높은 콘텐츠 중심으로 적극 안내, ▲현행 당사자 대상 안내문의 개선 추진
- [이용만족도 분석 및 피드백 강화] 중재위원 연수, 토론회 등 학술행사 및 총회 등을 이용해 위원회 이용만족도 실시 결과의 다각적 분석 및 시사점 제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심리진행 만족도 및 전문성 제고 지원] 신규 위촉 위원의 적시 적응을 위해 각종 규정, 매뉴얼 등 안내 자료를 개편, 강화함으로써 심리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ex) 심리 진행에 관해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 위원들에게 배포

1-3 이용자 맞춤형 교육 · 홍보전략 전개

- [교육 수강자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교육 실시] 상설화된 선거기사심의교육 창구를 통해 선거 기사 관련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대상자에게 실무적 도움 제공
-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지역 · 세대 · 홍보채널별 특성을 다각도로 고려해 위원회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세부전략 마련 및 실시

2-1 법개정 의제 대응 및 입법지원 연구 강화

- [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개정안 마련 · 입법 추진] 신생 미디어 플랫폼의 권리침해 해소방안, 중재부 증설 및 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선거기사심의기구의 상설화 등 현안을 반영한 법 개정안 마련 및 단계적 입법화 추진
- [입법 지원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입법 지원을 위한 연구 발간물의 개편 및 주제 선정, 학술행사의 개최, 정책 홍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이론적 근거의 체계 마련

2-2 심의의 전문성 · 적시성 도모

- [22대 총선 대비 선거기사심의 모니터링 강화] 공정한 선거기사심의를 위해 심의인력 상시 교육 강화를 통해 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총선 대비 선거기사심의위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3.12.11. ~ 24.5.10. 운영
- [이슈 적시 대응 및 시정권고 심의기준 재정비] ▲각종 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상시 확인해 시정권고 심의기준 재정비, ▲피의자 신상공개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주요 법리 및 심의 적용 방안에 대한 즉시적 검토

2-3 변화 주도형 인적자원 양성

- [지역사무소 업무역량 강화] ▲각 지역사무소의 조정·상담·심의·교육 등 제반 업무역량 강화 및 지속적 현황 관리, ▲지역사무소가 주도적으로 교육, 홍보, 지역 내 대외업무 등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신규 부임 지역사무소장에 대한 별도 교육 및 간사 대상 정기적 워크숍 개최 등 지역사무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업무 효율화 및 직원의 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종 인사제도의 기반 마련, ▲위원회 비전,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인재상 수립 관련 의견 수렴 및 사전 공론화(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방식 검토), ▲업무역량 증진을 위한 직급·직무교육 및 연구모임 등 지원 확대, ▲미디어 환경 변화 및 최신 이슈 이해도를 돕기 위한 외부 행사 등 적극 참석 장려

2023 ANNUAL REPORT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부록

1

중재위원 현황

서울 제1중재부		서울 제2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영광		허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기자, 사회부장, 편집국 부국장 •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전무이사, 부사장 • 스포츠경향 편집국장, 본부장 •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김석현		정동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경영기획 및 지원총괄 전무 • 중앙일보 경영기획 및 지원총괄 전무 • 중앙일보 M&P 총괄대표이사
우득정		박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장, 편집장, 부국장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 • (현)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자협회장 • CBS 미디어본부장 • (현)한국기자협회기금 이사장
원희복		박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한국산업은행 변호사 • (현)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대한변협 사무총장 • (현)변호사
이지은		이장희	

서울 제3중재부		서울 제4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정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황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논설위원, 편집인 •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이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체육부장, 스포츠사업팀장(국장급) • 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 • (현)대한언론인회 총괄부회장
 원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예능국장, 예능본부장 • 전주MBC 대표이사 사장 	 문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 (현)경찰청 법률자문단장 • (현)변호사
 김명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 편집국장, 논설실장, 편집인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석좌교수, 초빙교수 	 이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전무 • 한국경제TV 대표이사 사장
 김수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 (현)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현)변호사 	 김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 연합뉴스TV 전무이사

서울 제5종재부		서울 제6종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최육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송대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부국장, 논설위원, 교육사업본부장 • 스포츠동아 대표이사(발행인), 고문 	 김철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국제부장, 문화부장, 미디어부장, 논설실장
 이진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미디어연구소장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문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 사장 •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 (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백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스포츠부 차장 • SBS미디어넷 골프스포츠본부 총괄국장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변인 	 김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S 정치부장 •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 • (현)한국국토정보공사 옴브즈 위원
 하채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현)변호사 	 김민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 대변인 • (현)대한변호사협회 제1공보이사 • (현)변호사











서울 제7중재부		서울 제8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이명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등법원 판사 • 감사원 감사위원 • 제16대 언론중재위원장 (18.9.17.~21.8.31.) • (현)제17대 언론중재위원장, 변호사 	 김광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부국장, 논설위원 • SBS뉴스텍 대표이사 • (현)한국방송기자클럽 비상임감사
 이경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C 아나운서 • KBS 교양제작국 PD, 편성국 영화팀 PD • SBS 영화팀 차장, 편성제작팀 팀장(부장), 심의팀 위원(부장) 	 김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 펠로 • (현)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논설위원 • 뉴스1 편집국장, 대표이사 	 김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 (현)ROTC언론인회 회장 • (현)경기대 교수, 빅데이터센터 소장
 서정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앤장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현)변호사 	 최승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현)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 (현)변호사

부산중재부		대구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종수		서영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일보 사회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 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 •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상근부회장 • 뉴스1 부산경남취재본부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사회부문 부국장, 대구총국장 • (현)대구가톨릭대 교수
김일규		송의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논설위원, 국제외교안보 에디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대구총국장 • 대구한국일보 편집장 • (현)대구가톨릭대 교수
채인택		홍권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서부지검 검사 • 동의대 법학과 겸임교수 • (현)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법 부장판사 겸 대법원 연구법관 • (현)변호사
강호정		이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중문대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 (현)경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백지연		김소정	

광주중재부		대전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조영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나경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영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실장, 편집인, 주필 이사 • 광주매일신문사 사장 •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 부국장 • (현)대전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
 김덕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 (현)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현)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임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현)대한변호사협회 입법특별위원 • (현)변호사 	 김낙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 (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서애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남부지검, 전주지검 검사 • (현)변호사 	 최진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지법, 대전지법 판사 • (현)변호사

경기중재부		강원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세윤		윤경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일보 정치·경제·사회부장, 편집국장 • (현)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 콘텐츠 자문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민일보 편집국장 •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 한국ABC협회 이사
박흥석		방명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장, 과학벤처중기부장 • 이데일리 편집보도국장(상무) • (현)성균관대 겸임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해외문화홍보원장, 문화예술정책실장 • 한림대 글로벌협력대학원 객원교수
남궁덕		원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1 부국장 사회부장 • 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미디어본부장 • (현)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초빙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 • (현)한국광고학회 상임이사 • (현)한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김철훈		손영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일보 기자, 차장 •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현)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 (현)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 (현)변호사
정혜진		이용재	

충북중재부		전북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김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평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동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기자 • YTN 충청본부장 • 중부매일 논설위원 	 이흥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MBC 보도제작국장, 경영기술국장 • 새만금개발공사 이사 • 전북연구원 이사
 김찬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일기획 차장, 씨티은행 홍보이사 • 한국PR학회 회장 • (현)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인문사회대학장 	 조운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문화부장, 후마니타스 연구소장 •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성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S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 • CJB 청주방송 보도국장, 대표이사 	 이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변호사
 김혜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현)한국항로표지기술원 감사 • (현)변호사 	 조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경남중재부		제주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최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정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정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경남지사 기자, 경남취재본부장 	 고창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민일보 논설위원 • (주)제주풍력 상무
 권희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상담위원 • (현)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논설위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 (현)동국대 사회과학대학 대우교수
 박미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현)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 (현)변호사 	 김치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 교육혁신본부 본부장 • 전국국공립대학교 신문방송사주간협의회 회장 • (현)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장, 철학과 교수
 김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변호사 	 김세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변호사

2 2023년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관리항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인건비	7,828	7,626	202
경상비	경상비	2,530	2,461	69
사업비	조정 및 심의사업	2,235	2,146	89
	조사 및 연구사업	330	299	31
	홍보 및 교육사업	263	256	7
	소계	2,828	2,701	127
합계		13,186	12,788	398

3 2023년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정우택 의원	2023.1.5. 의안번호 19339	신청인(피해자)이 관할변경을 신청할 경우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10항)
김홍걸 의원	2023.2.6. 의안번호 1983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사에 인용보도 관련 지침을 정해 자율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윤두현 의원	2023.5.22. 의안번호 22191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함(안 제2조제1호·제1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
김승남 의원	2023.6.29. 의안번호 22955	조정이 신청될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에서 임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후단 및 제18조의2항)

4

2023년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 내용

질의내용	질의의원
• 장애차별적 표현에 대한 시정권고 관련, 심의 모니터원 및 언론사 대상 교육 적극 실시 당부	김예지 위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언론 심의 방침 관련	이병훈 위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언론 심의 방침 관련	유정주 의원
• 뉴스 표방 사이버레카 유튜브 채널의 가짜 허위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 당부	임오경 위원

5

2023년 주요 발간물 목록

연번	발간물	발행일
1	2023년 선거기사심의편람	2023. 1. 25.
2	2022년도 연간보고서	2023. 2. 28.
3	계간 <언론중재> 봄호(제166호)	2023. 3. 30.
4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1호	2023. 4. 15.
5	2022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2023. 4. 28.
6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2023. 5. 31.
7	계간 <언론중재> 여름호(제167호)	2023. 6. 30.
8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23. 7. 31.
9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2호	2023. 8. 15.
10	시정권고 편람	2023. 9. 8.
11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제168호)	2023. 9. 30.
12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제7호)	2023. 11. 10.
13	2024년 선거기사심의편람	2023. 12. 12.
14	알기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	2023. 12. 12.
15	선거기사 심의기준 해설집	2023. 12. 12.
16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3호	2023. 12. 15.
17	한 권으로 보는 언론조정실무(2024)	2023. 12. 20.
18	2023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	2023. 12. 22.
19	계간 <언론중재> 겨울호(제169호)	2023. 12. 30.
20	웹진 언론  사람(월간 대외홍보지)	매월 10일

이 책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과제 등을 담아 기술한 연간보고서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3 연간보고서

인쇄일 2024년 2월 23일
발행일 2024년 2월 29일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3114
팩스 02) 397-3029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제작 (주)계문사 02)725-5216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